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A n n u a l
r e p o r t



공무원연금공단

목 차

CEO 메시지	4
2016년 주요 지표	5
2016년 Highlights	6
공단의 전략체계와 경영진 현황	7
1. 공무원연금제도	9
1.1 제도 개요	
1.2 운영 구조	
1.3 제도의 발전과정	
1.4 향후 재정전망	
2. 공무원연금공단	21
2.1 공단 개요	
2.2 공단의 사업과 경영혁신	
3. 공무원연금기금	31
3.1 기금 개요	
3.2 기금 운용성과	
4. 재무제표	43
4.1 재무상태표	
4.2 손익계산서	
5. 주요 통계	51

CEO 메시지

이번에 발간하는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는 공무원연금제도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업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연금과는 분리되어 운영되는 이 제도는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재직 중 발생한 재해 보상과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재직 중이나 퇴직 이후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 등에 따른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연금 형평성 등에 있어 큰 개선 효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독립법인입니다. 공단에서는 연금제도 운영과 재해보상서비스, 기금운용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단 당시 2,059명이었던 연금 수급자는 45만 명으로 늘어났고, 한 해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액이 1,100억 원에서 1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기금 규모도 5,49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의 양뿐만 아니라 고객의 기대 수준도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3년의 창조적 변화, 30년의 든든한 미래’라는 비전의 제시를 통해 사업 부문별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재정은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안정성을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자산운용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와 중장기적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투자 상품별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도입하였으며 투자 및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영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기금운용수익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제도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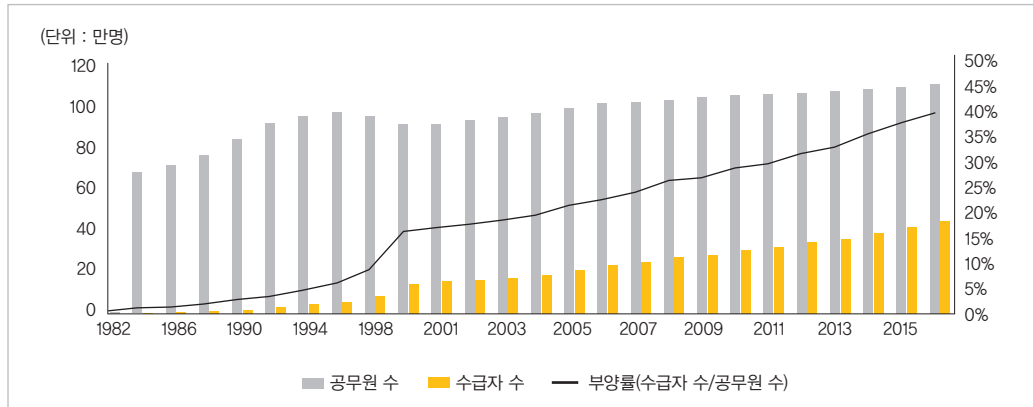
2017년 4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최재식

2016년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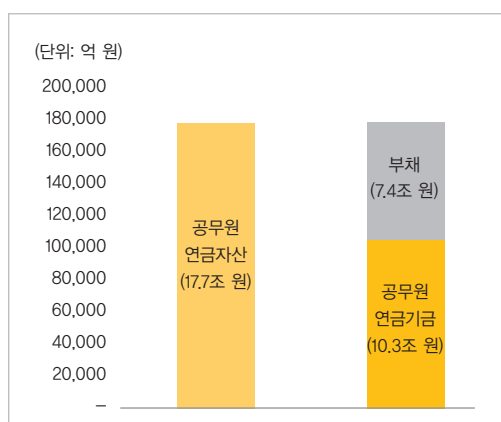
■ 재직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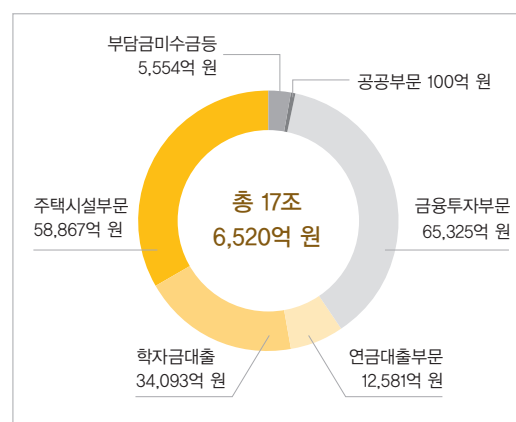
■ 공무원연금 수지 구조

구분	수입	지출
퇴직급여 (정부+공무원 공동부담)	<div>개인기여금+정부부담금 (9조 6,392억 원)</div> <div>정부 추가부담금(보전금) (2조 3,189억 원)</div> <div>연금이체부담금 등 (1,320억 원)</div>	<div>퇴직연금(11조 7,410억 원)</div> <div>퇴직일시금 등(3,491억 원)</div>
퇴직수당 (정부부담)	퇴직수당부담금(1조 9,302억 원)	퇴직수당(1조 9,302억 원)
재해보상급여 (정부부담)	재해보상부담금(1,309억 원)	재해보상급여 913억 원 부조급여 396억 원

■ 공무원연금 재무상태



■ 2016 공무원연금 자산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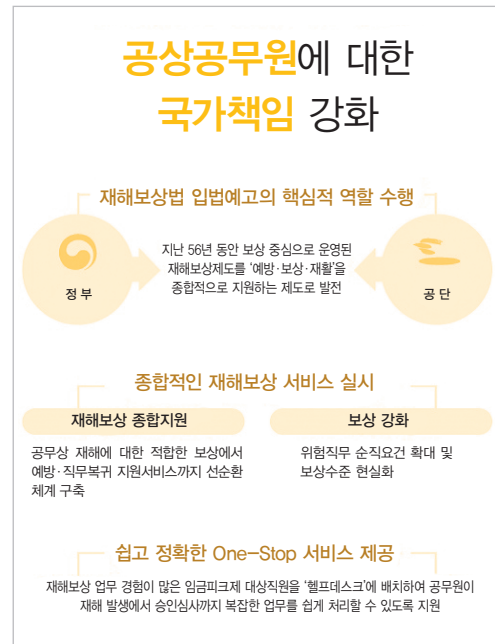


2016년 Highl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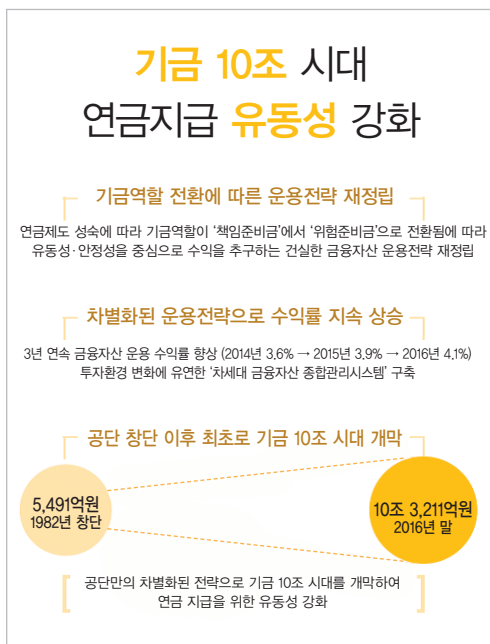
■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안정적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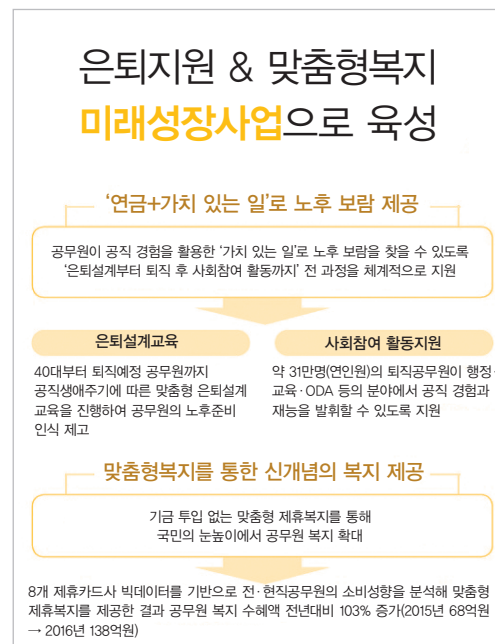
■ 재해보상법 분법 추진



■ 기금 10조원 달성



■ 은퇴지원 및 미래성장사업 육성



공단의 전략체계와 경영진 현황

■ 미션·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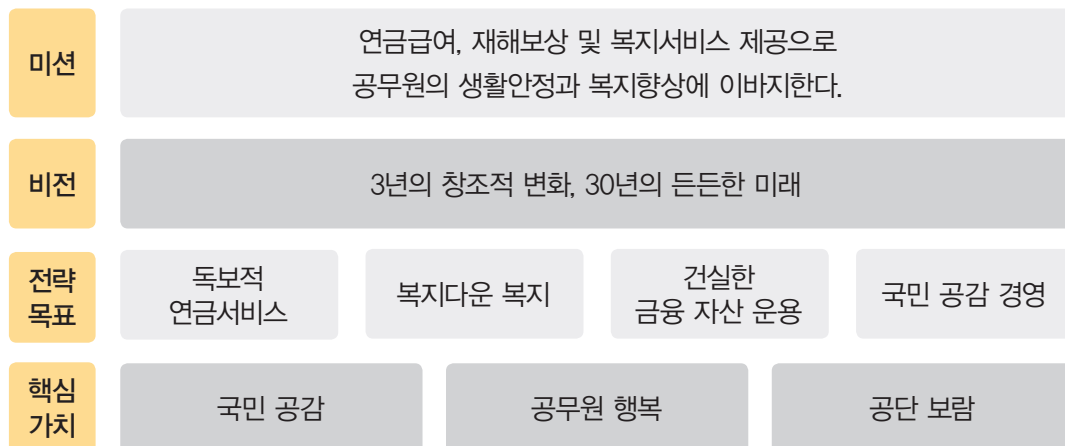
공단의 미션은 공무원연금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금급여, 재해보상 및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비전을 ‘3년의 창조적 변화, 30년의 든든한 미래’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기관장 취임 이후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수립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조직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5년 새로운 전략체계를 재정립하였다.

한편, 설립목적, 가치체계와 중장기 경영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직 개편·인력 재배치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

■ 중장기 경영 전략 체계도



■ CEO 경영 철학

- ① 신 비전(New Vision)을 만들고
- ② 변화의 주도자(Change Leader)가 되는 것
- ③ 창의성(Creativity)을 가지고 브랜드파워(Brand Power)를 키우며
- ④ 시스템적 사고(Systematic Thinking)를 체질화하는 것

경영진 프로필

(2017년 4월 현재)



최재식 이사장

공단 연금사업본부장
공단 전략기획실장
공단 공무원연금연구센터장



노병찬 감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권홍집 연금본부장

공단 총무인사실장
공단 대전지부장
공단 시설사업실장



이준 고객본부장

공단 기획조정실장
공단 운용지원실장
공단 전북지부장



최공휴 복지본부장

전인CM 건축사사무소 상무
신라밀레니엄파크 대표이사
대전스마트시티 SPC 대표이사



신진선 창조변화본부장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주태국한국대사관 총영사

1. 공무원연금제도

1.1 제도 개요

1.2 운영 구조

1.3 제도의 발전과정

1.4 향후 재정전망

1.1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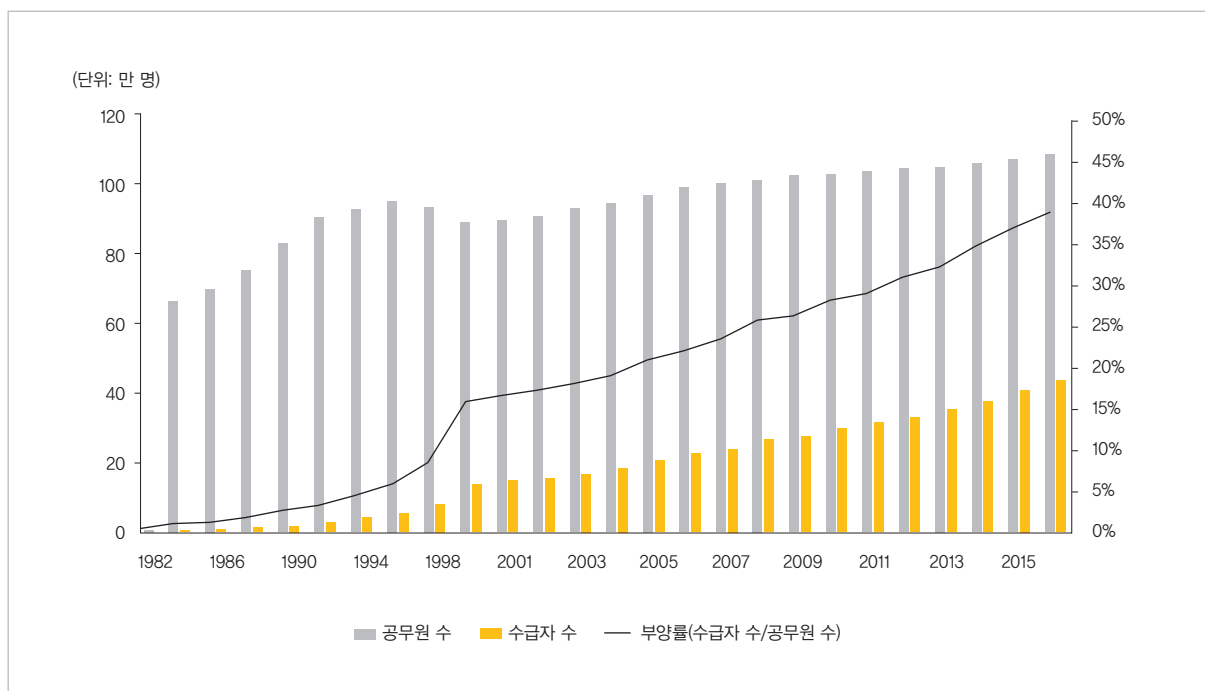
■ 목적과 적용대상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일반 국민연금제도(National Pension System)에 앞서 도입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196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사망, 재직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직업공무원제(Career-based civil servic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공무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직역 연금제도이다. 적용 대상을 보면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 경찰·소방 공무원, 법원 판사·검찰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하나의 독립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말 현재 현직 공무원 1,107,972명과 연금수급자 449,153명(연금지급개시연령 미도래자 13,273명 포함)을 합하여 총 1,557,125명이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향후 연금수급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의 연금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 공무원수와 연금수급자수 추이



■ 급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급여는 단기 보험사고에 대비하는 단기급여와 장기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급여로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으며,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서 퇴직급여는 제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며,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전액일시금 수령) 혹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부분일시금 수령)이 지급된다. 한편, 10년 미만 근무한 단기재직 공무원이 이직 후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공적연금 간 연계를 신청하게 되면 퇴직일시금 대신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의 산정에는 급여의 종류, 재직기간의 개척 전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기준보수, 연금지급률 및 지급요건이 달리 적용된다. 2016년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매 1년당 연금지급률은 전기간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7%이며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다. 최초 연금액 결정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액의 60%이다.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장애 상태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공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할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퇴직했을 때는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일시금 형태의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재해보상급여 중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해서는 특별보상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2016년부터 공무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질병·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보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조적 성격의 급여이다. 재해보조금은 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 재원의 구성과 기금 운용

연금재정의 조달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여제 방식(contributory plan)과 사용자로서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 방식(non-contributory pla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여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의 8.0%(총 16.0%)씩 부담을 하고 있다. 이 부담률은 점차 상향 조정하여 2020년도부터는 각각 9.0%(총 18.0%)씩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정해진 비용 부담률 이외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지출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의 경우 보전금은 약 3.6%에 해당되므로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부담률은 11.6%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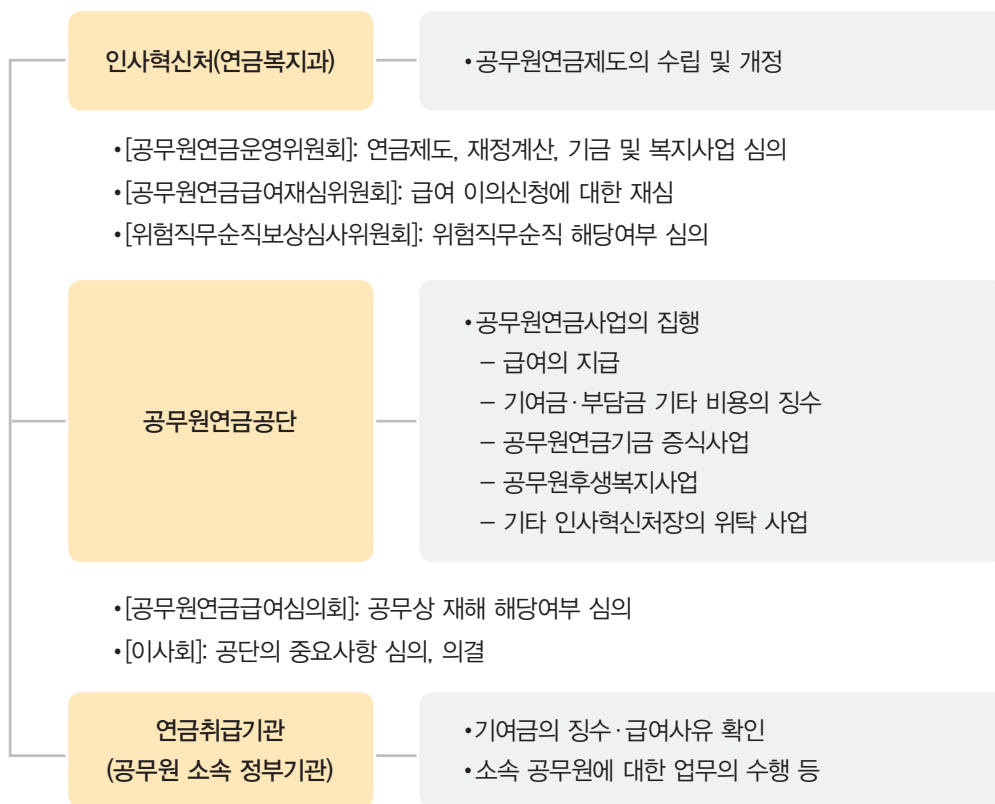
다음으로 비기여제 방식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 재해보상급여와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2016년 기준으로 재해보상급여는 보수예산의 0.2%, 퇴직수당은 약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금은 매년마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contributions) 수입에서 퇴직급여와 일반 유족급여 등을 지출하고 남는 금액 즉, 연금회계의 수지차액이라고 할 수 있는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그리고 기금의 자체 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하게 되어 더 이상 결산상 잉여금에 의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 연금수지상 부족액에 대한 정부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성된 기금의 운용수익금 만큼 기금의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금기금은 기금 증식을 통해 미래의 연금 지출에 대비하고 있지만, 현재 조성된 기금을 통해 재직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후생복지사업으로 대부, 주택임대 및 분양, 기타 휴양 시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2 운영 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은 인사혁신처장(제도 관장) - 공무원연금공단(업무 총괄) - 연금취급기관(소속 기관 업무집행)의 유기적 분담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인사혁신처가 연금제도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기금의 운용과 급여의 지급, 기여금 및 부담금의 징수 등 연금관리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일선 연금취급기관이 연금보험료(공무원 기여금) 징수,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총리 직속기관으로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 등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운영 관련 업무는 인사혁신처 소속 연금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금복지과는 제도 개선 연구, 연금 관계법령의 입안 및 해석, 기금운용 등 중요 정책사항의 결정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관리업무 및 기금운용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공무원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그 소속 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체 기구로서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등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연금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기타 공무원연금 전문가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공무원연금공단

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경과한 1982년 2월 1일에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단의 설립 목적은 공무원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을 분류하면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기타 국가위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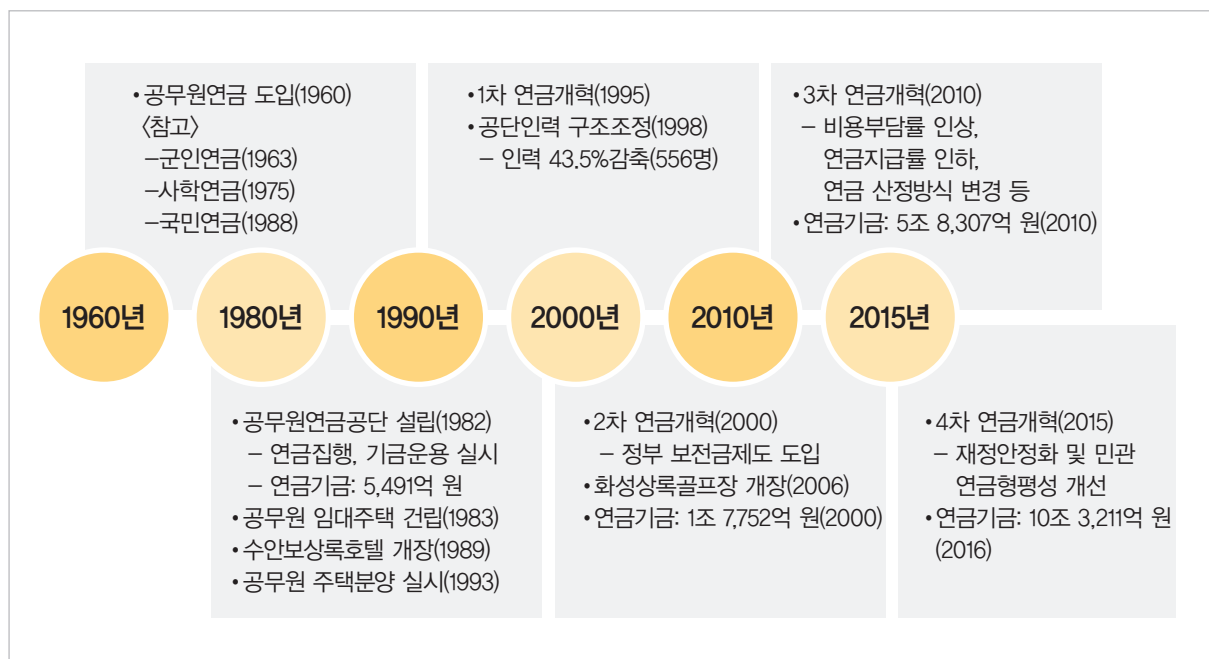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 급여사유 확인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취급기관은 약 1,560개로 분류되어 있다.

1.3 제도의 발전과정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 이상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징을 크게 살펴 보면 1990년대 초까지는 연금 수혜를 확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의 비용 부담률 인상 및 퇴직급여 등 수혜를 축소하는 방식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개혁을 통하여 연금수지 적자를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비중을 강화했으며, 2009년에는 비용 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이 있었다. 또한, 2015년에는 재정 안정화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의 개혁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공무원연금제도의 발전 및 변화 과정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 사업의 주요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동기(1960~1962년)

-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직, 경찰·소방직, 법원공무원, 군인 등을 포괄하여 적용하였음. 다만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적용에서 제외되었음.
- 급여의 종류는 퇴직연금, 유족일시금, 장해연금 등 5종의 장기급여를 실시
- 비용은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보수월액의 2.3%를 부담

■ 확대기(1963~1966년)

- 1962년 8월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하고 그간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공무원복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의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체제를 확립함
- 급여의 종류에 있어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등 5종의 단기급여를 신설하였고, 유족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 군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군인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1963년)

■ 발전기(1967~1981년)

- 1966년 4월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개정을 계기로 연금기금 운용방법이 크게 달라짐
 - 즉, 당해 연도의 잉여금을 정부 예산상의 세입세출과는 완전 분리하여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설치
 - 또한,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예탁하던 기금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매입,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금융기관에의 예입, 재정자금에의 예탁 등의 방법으로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연금 급여 면에서도 퇴직연금 지급률이 40%~50%에서 50%~70%로 인상 조정되었으며, 퇴직일시금도 종전보다 1.5배 정도 인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 전환기(1982~1995년)

- 20년 동안 정부에서 운영하던 공무원연금 업무를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도록 변경
 - 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확대실시 등을 위하여 1982년 2월 1일 사업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공공기관 설립
- 이를 통해 연금기금을 통한 각종 후생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연금제도면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수혜 확대를 위해 급여 종류의 다양화 및 급여액 수준의 인상조치가 이루어짐

■ 제도개혁기(1996~현재)

- 1990년대에 들어와서 연금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연금재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유지하던 공무원 복지의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게 됨. 이러한 연금개혁은 현재까지 크게 4차에 걸쳐 단행되었음

〈제1차 연금개혁: 1995년〉

- 20여 년간 고정되었던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비용 부담률이 인상되었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이나 연금기금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던 퇴직수당, 재해보조금 및 사망조위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하도록 변경
- 급여면에 있어서도 법 개정 이후 임용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신설, 공공기관 중 연금지급 정지 대상기관의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제2차 연금개혁: 2000년〉

-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비용 부담률을 올리고 향후 급여의 부족분은 매년 정부가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입 구조를 개선
- 급여면에서도 연금지급개시연령제의 확대, 연금액 인상 방법의 변경(공무원보수 인상률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연동), 연금지급정지제도의 확대 등 시행
- 이러한 개혁 조치 중에서 연금액 인상 방법 변경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반발로 2003년에는 이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
 - 연금액 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로 하되 매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2%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이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정책적 조정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3차 연금개혁: 2006~2009년〉

- 2006년 정부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이 위원회에는 각계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1기 및 2기의 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설치가 되어 장기간의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안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음
- 개혁 내용을 보면, 먼저 연금산정소득을 기본급과 일부수당만을 포함한 ‘보수월액(총소득의 65%)’에서 총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비용 부담률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한편, 연금액 산정을 최종보수 3년 평균에서 생애평균소득으로 전환하였음
-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법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
- 연금액 조정 방식은 정책 조정을 폐지하고 순수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전환

- 유족연금지급률을 법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70%에서 60%로 인하
- 기타 연금수급자에 대한 소득심사제를 강화하였으며,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연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제4차 연금개혁: 2014~2015년〉

-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 요인은 지속되었고, 특히 일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다시 개혁을 단행하였음. 특히, 2014년부터 논의되어 2015년에 완료된 이번 개혁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오던 것과 달리, 여야 국회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되었으며 다양한 이익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14% (공무원 7% + 정부 7%)	기준소득월액의 18%(단계적 인상) * '16년 16% → '17년 16.5% → '18년 17% → '19년 17.5% → '20년 18%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단계적 인하)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0년 1.72% → '35년 1.7%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없음	지급률 1.7% 중 1%에 재분배 요소 도입
기준소득월액 상한의 하향 조정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 수급 요건 조정		20년	10년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 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 적용 * 개정 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 한시 동결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5년간 동결('16 ~ '20년)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전액 정지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선거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전액 정지 포함
	일부 정지	정지 기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14년 338만원)	정지 기준: 평균연금월액('14년 224만원)
		심사 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	심사 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분할연금제 도입		없음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비공무상 장애연금 도입		없음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시 지급(공무상 장애연금액의 1/2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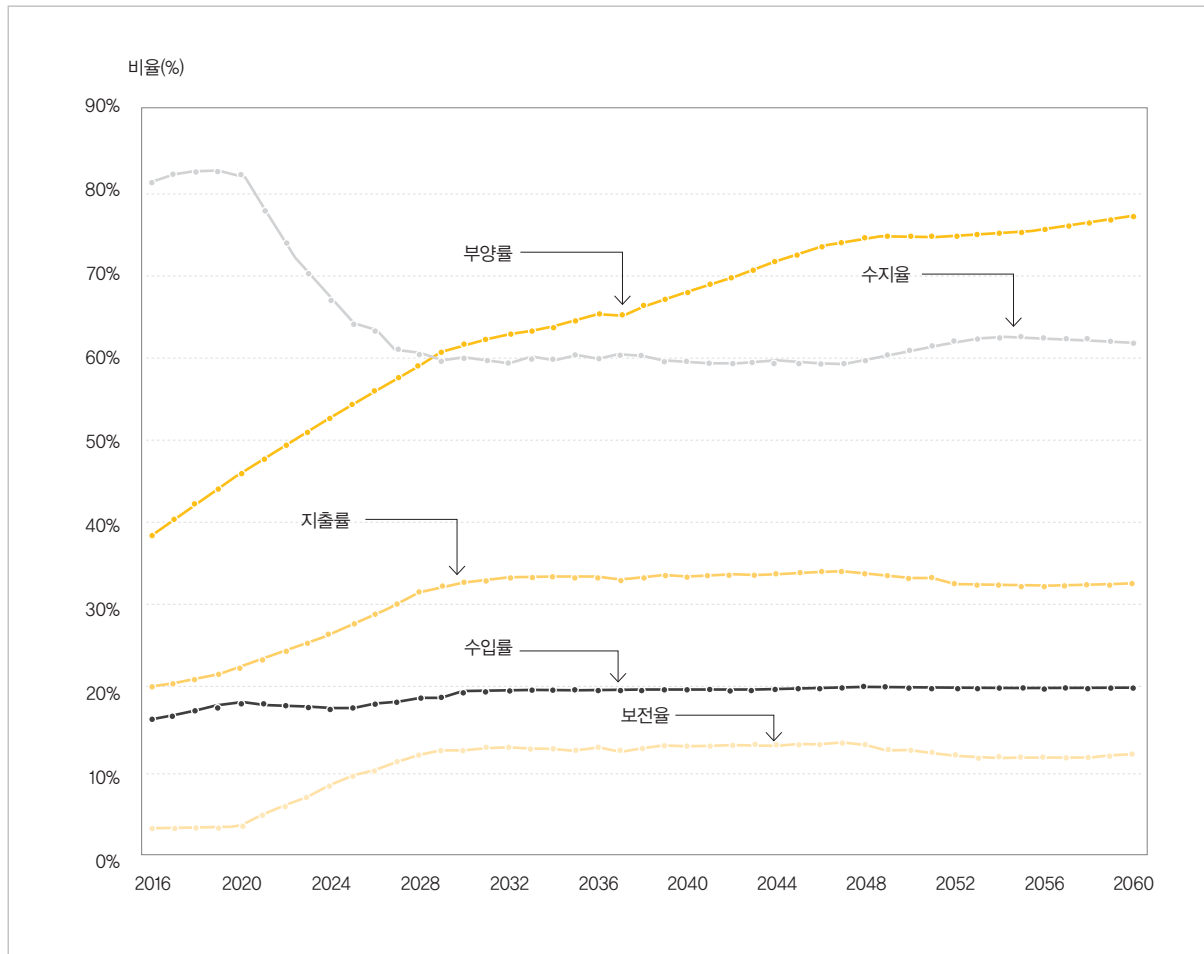
1.4 향후 재정전망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공무원연금재정을 추계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률(연금수급자 수/공무원 수)은 2017년 약 41%에서 2060년에 약 77%에 이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보전율(추가 지원금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3.8%에서 12.6%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지출률은 연금산정 보수예산 총액 대비 최대 34.5%(2040년경), GDP대비 1.0% 이내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OECD 국가의 공무원연금 평균지출액 약 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 도	부양률	지출률		수입률	수지율	보전율
		기준소득 총액대비	GDP대비*			
2017	40.7%	21.1%	0.8%	17.4%	82.2%	3.8%
2018	42.6%	21.7%	0.8%	17.9%	82.4%	3.8%
2019	44.4%	22.3%	0.8%	18.4%	82.5%	3.9%
2020	46.4%	22.9%	0.8%	18.8%	82.1%	4.1%
2025	54.6%	28.3%	0.9%	18.2%	64.4%	10.1%
2030	61.7%	33.3%	1.0%	20.1%	60.3%	13.2%
2035	64.6%	33.8%	1.0%	20.5%	60.6%	13.3%
2040	68.0%	34.1%	1.0%	20.4%	59.7%	13.7%
2045	72.7%	34.5%	1.0%	20.5%	59.5%	14.0%
2050	74.8%	33.8%	1.0%	20.7%	61.2%	13.1%
2055	75.2%	32.9%	1.0%	20.6%	62.7%	12.3%
2060	76.9%	33.1%	1.0%	20.6%	62.1%	12.6%

* 2015년 장기재정전망 실질GDP 기준

주요 장기재정전망지표 추이



지표의 정의

- 부 양 률: 연도말 연금수급자수 ÷ 연도말 재직자수
- 지 출 률: 연간 연금지출액 ÷ 보수총액
- 수 입 률: 연간 연금수입액 ÷ 보수총액
- 수 지 율: 연간 연금수입액 ÷ 연금지출액
- 보 전 율: 연간 연금수지 적자액 ÷ 보수총액

2. 공무원연금공단

2.1 공단 개요

2.2 공단의 사업과 경영혁신

2.2.1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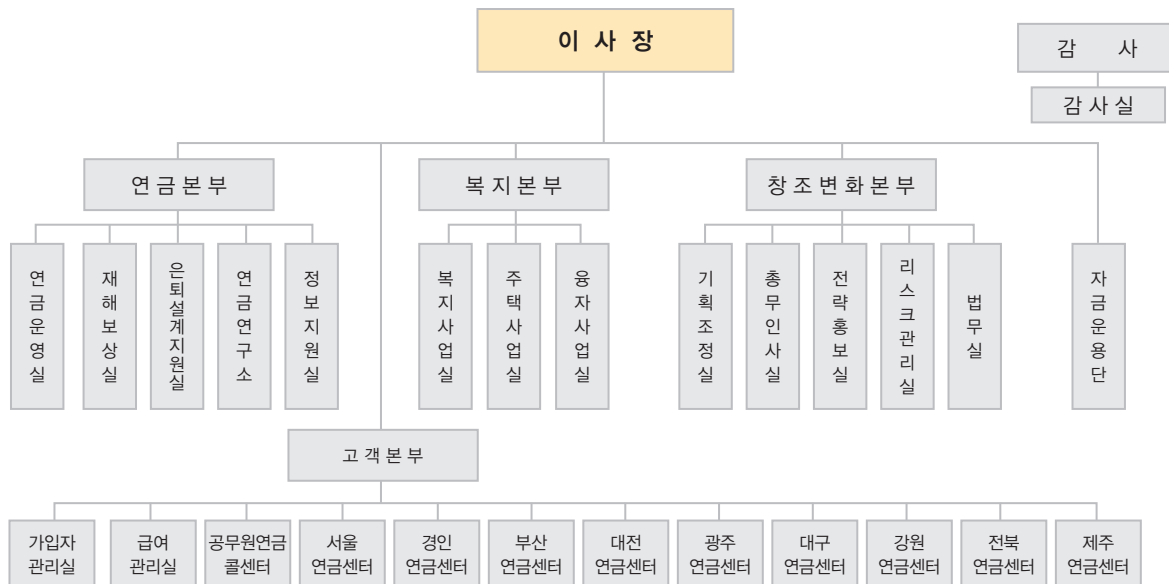
2.2.2 경영혁신

2.1 공단 개요

1982년 2월 정부조직과는 별도로 설립된 공단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조직도

(2017년 현재 기준)



■ 인원 현황

(2017년 현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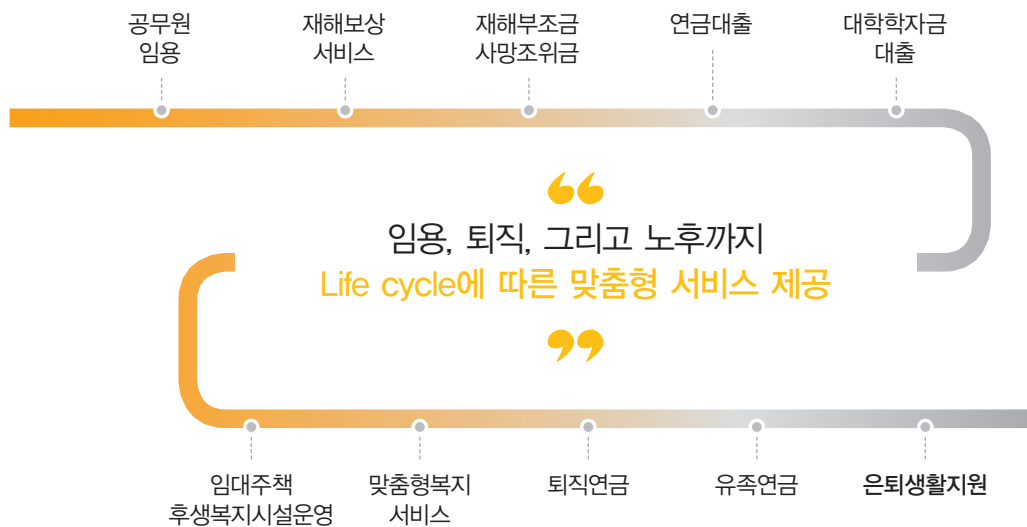
구 분	조 직	인원
임 원	-	5
이사대우	-	1
연금본부	4실 1연구소	133
고객본부	2실 10센터	173
복지본부	3실	79
창조변화본부	5실	95
자금운용단	1단	29
감사실	1실	11
합 계	4본부 15실 1단 1연구소 10센터	526

2.2 공단의 사업과 경영혁신

공단의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기타 국가위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의 징수 퇴직급여, 재해보상급여, 그 밖의 급여의 지급
기금운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에의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에 대한 대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국가위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학자금 대출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리 은퇴생활 지원사업 등

이러한 공단의 사업은 공무원 개인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임용시기부터 사망 시까지로 시기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업의 흐름도로 구성되어 있다.



2.2.1 주요사업

■ 연금서비스

연금서비스는 공무원과 정부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하고 공무원이 퇴직, 사망 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생애주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재해보상서비스

재해보상서비스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무상 재해 발생			
부상·질병	장애	사망	
공무상요양비 실제요양기간 범위 내 지급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액의 5년분 일시 지급 또는 장해연금 퇴직시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지급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중 본인 선택	순직유족보상금 기준소득월액의 23.4배는 기본 지급 + 순직유족연금(추가지급)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또는 32.5%(20년이상) ※ 퇴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중 본인 선택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4.2배 지급 ※ 대간첩작전수행시, 57.7배 지급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미만) 또는 42.25%(20년이상) 지급

이와 함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조위금 또는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 기금운용사업

금융자산운용은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우량한 금융상품을 선별하여 투자·운용하는 사업이다.

자산운용 체계는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통해 금융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과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투자한다. 투자자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사후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용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산배분·성과평가·위험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금융자산 종합관리시스템(AMS)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 융자사업

융자사업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 및 자녀 학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공무원연금기금 또는 국고를 재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학자금대부〉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외 대학 등록금을 실제 등록금 범위 내(해외 대학 연간 \$10,000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연금대부〉

공무원 본인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

〈가계자금 융자 알선〉

예상 퇴직금의 1/2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있다.

■ 시설운영사업

제도 가입자인 공무원과 그 가족의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해 가족호텔, 온천시설, 아쿠아피아, 놀이공원, 골프장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휴양레저시설(1개), 가족호텔(1개)과 4개의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다.



■ 주택사업

주택사업은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공단 소유의 임대주택을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건립 분양〉

무주택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립·분양하고 있다. 1982년부터 2016년까지 33개 단지에 총 32,058세대를 공급하였다.

〈임대주택 운영〉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70개 단지에 20,781세대의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금의 60~80% 수준으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 기간은 총 4년(2년+2년)이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6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 맞춤형복지사업

맞춤형복지제도란 정부가 사전에 설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자기계발, 가정친화 등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2006년 11월부터 맞춤형복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07년 1월부터 맞춤형복지업무를 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 등 73개 기관, 약 67만 명이 사용 중에 있다.

■ 은퇴생활지원사업

은퇴생활지원사업은 공무원이 재직 시부터 은퇴 생활을 준비하고 퇴직 이후에는 맞춤형 은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퇴직 이전〉

퇴직 이전에는 미래설계교육, 전직(轉職)설계교육 등 은퇴준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퇴직 10년 전, 5년전, 1년 전 등으로 구분하여 퇴직 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퇴직 이후〉

퇴직 이후에는 배움과 나눔 등 사회 공헌 교육, 사회 참여·문화·생활 강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공직 경험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퇴직자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 240개 기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상록자원봉사단 약 25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1.2 경영혁신

공단에서는 변화하는 연금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달성한 주요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단행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안정적인 적용과 연금업무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공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해보상법 마련을 추진하였다. 셋째, 지불준비금으로서의 기금 역할의 재정립과 기금 10조 원 시대의 연금지급 유동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넷째, 점차로 증가하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은퇴생활지원과 맞춤형복지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국민공감 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개정연금법 안정적 적용과 연금업무 운영체계 효율화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상시적이고 중복적인 검증 체계의 강화를 통해 업무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변경된 연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연금법에 따라 수혜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불만을 제기하는 공무원과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각각의 그룹별 특성에 따른 안내와 설명회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런 노력을 통해 개정된 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함으로써 신제도의 빠른 정착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낸 연금서비스의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고객인 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과거에는 공무원 퇴직 시 급여의 청구를 소속 기관을 통하여 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의 향상에 따라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연금수급자의 계좌 변경이나 주소의 변경 등에 대하여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확대하여 인터넷이나 유선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제고시켰다. ② 둘째, 연금업무의 실시간(real-time)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성을 크게 높였다. 연금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연금운영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전산시스템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가입자의 신분변동, 급여의 지급 및 타 공적연금과의 연계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급여 청구시 무서류, 무방문, 무전화 등 ‘3무(無) 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급여의 청구에서 연금 지급 승인까지 과거 9일이 소요되던 것을 1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셋째, 정부의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입자 관리 및 연금수급자의 급여수급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급여 지급 시의 업무처리 오류율이 약 0.06%이던 것이 2016년에는 0.004%(총 44만9천 건 중 16건)로 거의 제로(Zero)화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사후에 즉시 개선되므로 사실상 무결점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무원연금제도에는 노후 소득을 위한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급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에는 노후소득보장 급여 부분에 대한 개혁이 중심이 되었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의 개선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에서 별도로 분리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새로 신설되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상향조정하고 재해의 예방부터 보상 및 재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무상재해 중에서 화재 또는 범인 검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더욱 높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보상 절차를 개선하여 쉽고 빠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재해보상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직원을 선정하여 ‘헬프데스크(Help Desk)’에 배치함으로써 재해발생 시부터 공무상 재해의 승인 심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이러한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정부에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2017년도 중 국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기금 10조 시대: 연금지급 유동성 강화

공무원연금기금은 제도 초기에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지출액의 약 3배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무원 대량 퇴직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보유 기금이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재정 적자는 전액 정부가 추가 부담하도록 개정되면서 기금은 위험준비금으로서 역할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의 기금 역할에 맞도록 유동성·안정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수익성을 고려하는 건실한 금융자산 운용전략을 재수립하였다. 이러한 차별화된 운용전략으로 연금지급의 유동성이 강화되었으며,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에 있어서도 2014년 3.6%, 2015년 3.9%, 2016년 4.1% 등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한편, 보유 기금은 2000년 1조7천억원으로 급감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증가하여 지난해에 창단 이후 최초로 기금 적립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도 급여지출액의 약 86% 수준에 해당한다.

■ 은퇴지원 & 맞춤형 복지: 미래성장사업으로 육성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재직 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의 은퇴지원서비스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적절한 연금의 제공과 함께 가치있는 일로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일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이 은퇴 이후에도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은퇴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재직 시에 은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은퇴 이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은퇴설계교육은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40세부터 퇴직 이전까지의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 퇴직예정자교육(연인원 14,069명), 퇴직자아카데미(연인원 23,424명) 등 다양한 내용의 노후 지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은 퇴직 이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의 각 분야에 퇴직공무원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에 'G-시니어' 포털을 구축하여 사회 참여 정보와 동호회 활동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 상담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을 통해 약 250개의 자발적 봉사단이 조직되어 있고, 2016년의 경우 연인원 약 30만9천 명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 공단에서는 미래성장사업으로서 기금의 투입이 없는 맞춤형복지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써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 복지제도(Cafeteria Plan)이다. 이는 종전에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것을 줄여나가고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킨 신개념의 복지제도이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선택한 공무원 수는 2015년 전체 공무원의 41%에서 2016년 57%로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8개의 제휴카드사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현직 공무원의 소비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제휴 복지를 제공한 결과 공무원의 복지수혜액이 전년 대비 2배(68억 원 → 138억 원) 이상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사회적 책임 완수로 국민공감 경영 실천

우리 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고객인 공무원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정부의 '스마트워크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및 '정부 3.0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연금서비스의 브랜드화로 국내의 권위있는 상(賞)인 '한국의 경영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3. 공무원연금기금

3.1 기금 개요

3.1.1 기금의 구성과 운용

3.1.2 기금 운용체계

3.1.3 기금 운용방법

3.2 기금 운용성과

3.1 기금 개요

3.1.1 기금의 구성과 운용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다. 이 연금기금은 연금 회계로부터의 적립금과 연금기금을 금융자산, 연금대출, 시설·주택사업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연금보험료 수입이 급여지급액을 초과하여 연금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연금기금이 급여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1995년 처음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7년 6조2,015억 원에 달했던 기금 규모가 2000년 말에는 1조7,752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연금기금 감소로 인해 책임준비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연금수지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 주는 보전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 만큼 기금규모가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10조3,211억 원으로 성장했다.

공무원연금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 원, 2016년 12월말 기준)

연도별	연금수지*			기금운용수익	연말기금규모
	수 입	지 출	차 액		
1981					5,491
1982	2,684	1,611	1,073	1,140	7,704
1984	3,673	1,841	1,832	1,461	14,672
1986	3,931	2,897	1,034	2,087	20,951
1988	5,418	4,596	822	2,641	27,893
1990	7,898	7,236	662	3,345	35,786
1992	12,767	12,095	672	3,810	44,918
1994	17,520	19,351	△1,831	5,242	52,414
1996	24,760	24,321	439	4,871	56,805
1998	33,164	50,698	△17,534	3,363	47,844
2000	34,374	43,832	△9,458	920	17,752
2002	39,512	35,736	3,776	2,604	27,276
2004	49,264	49,264	—	2,543	33,218
2006	61,775	61,775	—	3,934	42,229
2008	78,293	78,293	—	△1,182	46,861
2010	84,232	84,232	—	6,434	58,307
2011	89,391	89,391	—	1,798	60,105
2012	103,520	103,520	—	3,471	63,576
2013	107,624	107,624	—	20,094	83,670
2014	125,417	125,417	—	1,602	85,272
2015	136,769	136,769	—	2,270	87,542
2016	140,203	140,203	—	15,669	103,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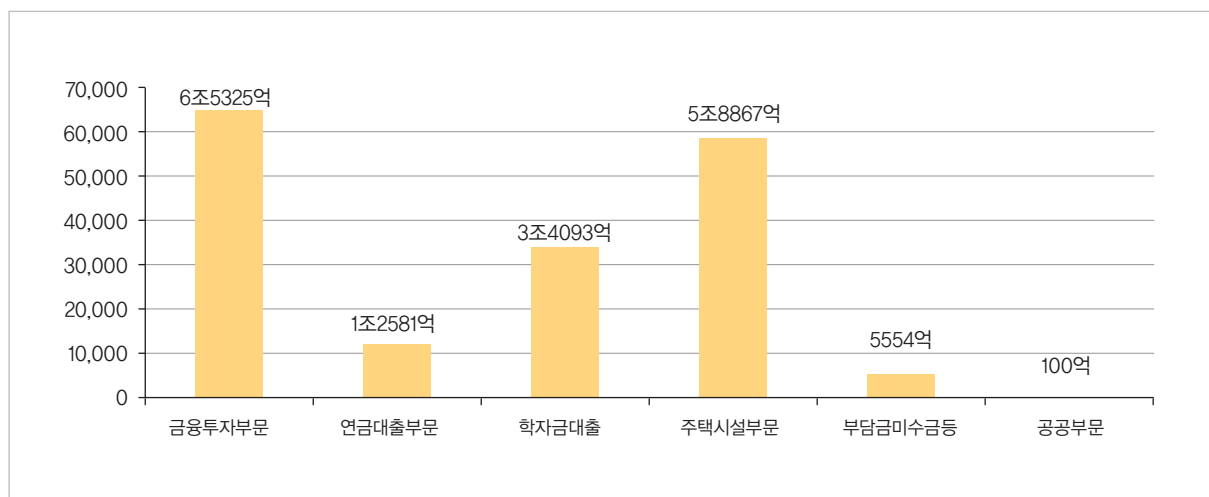
* 연금수지에는 퇴직수당 포함,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는 제외

공무원연금자산의 부문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말 현재 연금자산은 총 17조6,520억 원이며, 금융투자 6조5,325억원(37.0%), 연금대출 1조2,581억 원(7.1%), 학자금대출 3조4,093억 원(19.3%), 주택시설사업 5조8,867억원(33.4%), 기타 부담금미수금 등 5,654억 원(3.1%)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자산의 부문별 투자액

(단위: 억 원,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융투자부문	연금대출부문	학자금대출	주택시설부문	부담금미수금등	공공부문	자산합계
액수	65,325	12,581	34,093	58,867	5,554	100	176,520



3.1.2 기금 운용체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은 공무원연금법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 중심의 규정을 대출 자산 및 실물자산까지 포함시켜 전체 자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기금운용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기금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공단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용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융자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금융자산운용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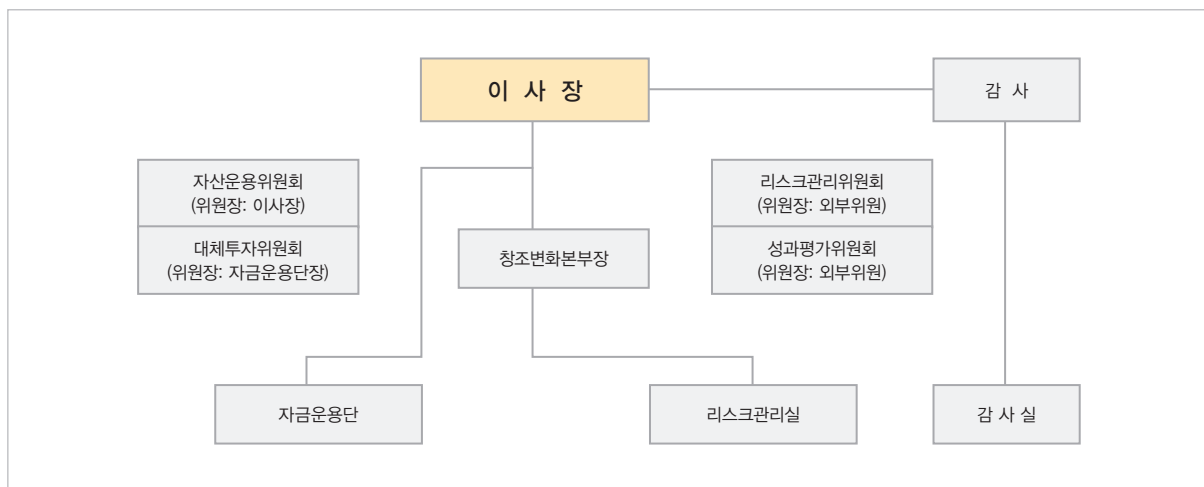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단』에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산배분·평가·위험 관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금융자산운용기구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및 「대체투자위원회」)와 실질적인 운용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위험 관리와 성과평가를 위해 자산 운용 기구

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과평가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 자산은 특히 2단계 자산 배분 절차를 거쳐 심의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한편, 주택사업과 시설사업 등 실물자산운용을 위해 「실물자산 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금운용관련 조직도

(2016년 12월말 기준)



공무원연금공단 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내역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자산운용 위원회	대체투자 위원회	실물자산 운용위원회	성과평가 위원회	실물자산 운용위원회
목적(기능)	전체자산 배분·운용	대체투자 심의	실물자산 배분·운용	성과평가 심의	실물자산 배분·운용
구성원	위원수	14명	21명	11명	11명
	위원장	이사장	자금운용단장	복지본부장	외부위원

3.1.3 기금 운용방법

■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 원칙

공무원연금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목적은 기금 증식을 통해 공무원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기금의 운용은 기금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복지성에 따라 자산을 운용한다. 즉,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성,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 및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을 위한 유동성,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복지성에 준수하여 운용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목표 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 향후 5개년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안 및 기금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자산배분안에는 경제 상황 또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군별 투자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기금운용의 자산군 분류

자 산 군 분 류

•금융자산

- 채권(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등)
- 주식(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주식, 순수주식형,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등)
- 대체투자(부동산펀드, 사모펀드, SOC펀드 등)
- 단기자금(지불준비금 / 단기특정금전신탁, MMF, MMDA, 예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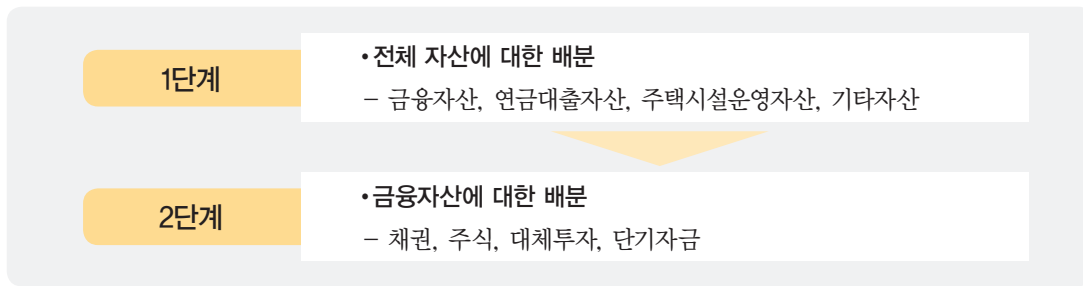
•실물자산

- 공무원주택자산
- 공무원시설운영자산

•연금대출자산

■ 자산 배분 전략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중장기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목표자산 배분 비중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공단 자산 운용상 특이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1단계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전체 자산 배분 전략(금융자산, 용자자산, 주택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을 수립하고, 2단계로서 금융자산의 배분 전략(채권, 주식, 대체투자)을 수립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 목표는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 수익률은 기금의 특성인 높은 단기자산의 비중을 고려하여 자금 성격에 따라 중장기자산과 단기자산, 전체자산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중장기자산은 실질경제성장률(GDP) + 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 기금의 유동성 제약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단기자산은 CPI개월물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자산은 중장기자산과 단기자산의 목표 수익률을 가중한 값으로 설정하고 있다.

금융자산 허용위험 한도는 금융자산 운용성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하락 위험에 대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최대한도로 설정하며, 자산배분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중장기자산(전체자산에서 단기자산 제외)의 운용 수익률이 일정한 수익률(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정한다.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의 비중 허용 범위 내에서 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 범위 내에서 금융자산투자위원회를 통해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위험 관리 체계

각종 위험(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법규 위험, 운영 위험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자산 운용에 따른 위험과 자금 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산운용의 위험 종류

- **시장 위험:**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
- **신용 위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 원리금 등을 애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
-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 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법규 위험:** 법 해석 또는 계약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해 기금이 손실을 보게 될 위험
- **운영 위험:** 적절하지 않은 내부 통제 제도나 업무 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 성과평가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 자산 운용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결과를 자산운용 및 보상체계에 반영(Feedback)하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와 병행하고 있다.

■ 공시 및 의결권 행사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 처리를 하고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제반 결과를 공시하게 되어 있다. 공시의 필수 사항으로 5년 이상의 기간실적자료, 시간가중수익률 사용, 벤치마크,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사용여부, 수수료 포함 여부 등이 있으며, 권고 사항으로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검증, 회사 내부 사항(인사이동 등), 위험지표 등이 있다. 특히,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사장은 다음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공시하고 있다.

주요 공시사항

- 월간 및 분기 공시사항: 투자 현황 및 투자 상품별 운용 수익률 등
- 연간 공시사항: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수입지출 및 기금 적립 현황, 총 투자 현황 및 투자 상품별 운용 수익률, 기금운용지침 등
- 수시 공시사항: 이사장이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금융자산 투자 관리

기금운용규정 제4조와 제16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공공성을 고려하면서 기준 수익률 이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금융자산의 투자 관리 의사결정체계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등)와 실질적인 운용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운용조직인 자금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단의 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금융투자자산은 채권, 주식, 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게 되어 있다.

■ 금융자산 배분 계획

2016년 자산군별 비중조정 및 허용 범위

(단위: 억 원, %, %p)

구 분		합 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대체	해외대체
비중 기준	목표 비중	100.0	41.5	5.0	24.8	8.7	16.2	3.8
	허용 범위	-	±8.0	±3.0	±9.0	±3.5	±4.0	±4.0
금 액		53,966	22,403	2,695	13,385	4,692	8,749	2,042

* 금융자산운용지침상 '16~'20년 중장기 배분계획의 '16년 이행 포트폴리오 등을 반영하여 배분

2016년 자산군별 목표수익률 설정

(단위: 억 원, %)

구 분	합 계	채 권	주 식	대체투자	단기자산
운용평잔	59,262	22,493	17,243	9,590	9,936
목표 수익	2,350	572	1,081	537	160
목표 수익률	4.0	2.5	6.3	5.6	1.6

3.2 기금 운용성과

■ 요약 재무상태표¹⁾

공무원연금기금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억 원)

구 분	2015년말		2016년말	
	금 액	자산대비 비율	금 액	자산대비 비율
○ 공공기금예탁	100	(0.1%)	100	(0.1%)
○ 금융자산운용	52,647	(33.1%)	65,325	(37.0%)
- 채 권	22,583		28,843	
- 주 식	16,094		20,609	
- 대체투자	7,219		8,866	
- 지불준비금	6,751		7,007	
자 산				
○ 연금대출사업	12,670	(8.0%)	12,581	(7.1%)
○ 학자금대출사업	35,319	(22.2%)	34,093	(19.3%)
○ 주택사업	41,727	(26.2%)	48,656	(27.6%)
○ 시설운영사업	7,909	(5.0%)	10,211	(5.8%)
○ 부담금미수금 등	8,717	(5.4%)	5,554	(3.1%)
자 산 계	159,089	(100.0%)	176,520	(100.0%)
○ 주택임대보증금	17,154		16,253	
○ 주택도시기금차입금	4,946		3,187	
○ 임대보증금 및 수선충당금	461		474	
○ 대여학자금수탁금	45,339		45,231	
○ 임대주택매각선수금 등	3,647		8,164	
부 채 계	71,547	(45.0%)	73,309	(41.5%)
기 금 총 액	87,542	(55.0%)	103,211	(58.5%)
기금증가액	2,270		15,669	

1)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의 「정보공개-경영공시-경영성과」에 공시

■ 금융자산 운용성과

연도별 금융자산 보유 현황

(단위: 억 원, %,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2015		2016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채 권	국 내	21,328	40.5	26,968	41.3
	해 외	1,255	2.4	1,876	2.9
	전 체	22,583	42.9	28,844	44.2
주 식	국 내	12,672	24.1	14,979	22.9
	해 외	3,422	6.5	5,629	8.6
	전 체	16,094	30.6	20,608	31.5
대체투자		7,219	13.7	8,866	13.6
단기자금		6,751	12.8	7,007	10.7
금융부문 전체		52,647	100.0	65,325	100.0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수익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8	3.5	3.5	3.4	3.4	3.5

금융자산의 세부자산별 평잔수익률

(단위: 억 원, %,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평잔액	수 익	수익률
채 권	국 내	23,836	498	2.1
	해 외	1,421	43	3.0
	전 체	25,257	541	2.1
주 식	국 내	13,780	786	5.7
	해 외	4,530	486	10.7
	전 체	18,310	1,272	7.0
대체투자		8,820	337	3.8
단기자금		16,248	257	1.6
계		68,635	2,407	3.5

■ 연금대출자산 운용성과

연도별 연금대출자산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2016년 12월말 기준)

연도별	대출건수	대출금액	상환금액	대출잔액
2011	33,224	4,999	5,319	8,312
2012	51,444	7,397	5,533	10,176
2013	60,144	8,898	6,226	12,847
2014	45,241	7,000	7,119	12,728
2015	44,301	6,997	7,055	12,670
2016	37,031	6,300	6,389	12,581

연도별 실적 비교

(단위: 명, 억 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대출 인원	31,315	38,423	35,070	34,629	31,264	34,889	33,224	51,444	60,144	45,241	44,301	37,031
대출 금액	4,793	4,947	4,995	5,000	4,996	4,998	4,999	7,397	8,898	7,000	6,997	6,300
운용평잔	7,678	9,073	9,600	10,169	9,667	9,284	9,832	11,249	12,855	14,538	14,970	15,053
이자 수익	471	536	613	662	565	526	526	600	589	594	501	470
수익률(%)	6.13	5.91	6.39	6.51	5.84	5.67	5.35	5.34	4.58	4.09	3.35	3.12

※ 대출이자율 변동내역(최근 5년간)

• 4.84%('13년 1월) → 4.21%('14년 1월) → 3.64%('15년 1월) → 3.06%('16년 1월) → 3.08%('17년 1월)

■ 실물자산 운용성과

○ 주택사업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 익	2,005	260	1,151	1,782	1,708
감가상각비	217	302	344	345	444
계	2,222	562	1,495	2,127	2,152
투자평잔	20,218	16,701	23,542	26,698	23,101
수익률	10.99%	3.36%	6.35%	7.97%	9.31%

※ 1. 부동산별 최초 취득가액 평잔 기준으로 작성(분양주택은 연도별 준공정산 완료단지만 반영)

2. 1억 원 미만 반올림한 금액으로 수익률은 백만 원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

○ 시설운영사업

연도별 시설운영사업 투자 현황

(단위: 억 원,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영손익	143	131	135	113	157
감가상각비	34	27	30	31	36
계	177	158	165	144	193
취득가평잔	178	180	182	184	218
수익률	10.0%	8.8%	9.1%	7.8%	8.9%

※ 1. 천안·화성 평균 수익률

2. 취득가수익률 기준(운영 손익+감가상각비) / 토지,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 평잔 기금운용수익률 산정지침 제8조 기준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4.2 손익계산서

4.1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과 목	2015년	2016년	과 목	2015년	2016년
자 산	15,908,864,895,388	17,651,988,201,289	부 채	7,154,643,133,486	7,330,885,190,490
I. 유동자산	3,706,260,162,339	3,478,482,878,559	I. 유동부채	359,949,447,134	813,173,478,579
(I) 당좌자산	2,898,158,768,455	2,827,430,521,509	(I) 유동부채	359,949,447,134	813,173,478,579
1. 현금	32,084,020	36,932,591	1. 매입채무	293,751,069	298,758,245
2. 당좌예금	214,709	486,134	2. 미지급금	3,480,821,615	5,719,131,908
3. 보통예금	350,088,870,806	93,004,569,116	3. 선수금	193,557,723,096	598,329,214,692
4. 지불준비금	675,122,000,000	700,737,000,000	4. 부가세예수금	433,007,506	—
5. 단기예치금	28,479,785,720	31,967,238,577	5. 예수금	657,514,058	462,800,500
6. 미수수익	6,875,551,062	9,992,845,025	6. 미지급비용	365,682,590	177,710,775
7. 급여자금전도금	—	1,192,843	7. 선수수익	517,643,540	313,015,911
8. 단기공무원연금대부금	414,890,000,182	396,297,201,522	8. 예수보증금	61,871,070	468,509,667
9. 단기직원대부금	439,312,050	354,846,750	9. 임대보증금	16,965,379,025	13,409,583,016
단기대부자산대손충당금	△4,153,294,000	△2,155,641,000	10. 선수기여금	1,204,335,247	849,621,387
10. 단기채무증권	220,988,429,242	416,327,142,598	11. 선수부담금	121,705,954,360	161,020,231,618
11. 단기지분증권	892,773,065,266	847,597,569,961	12. 미지급급여	5,929,809,680	11,068,887,490
12. 단기파생상품자산	—	939,061	13. 연금소득예수금	1,460,072,430	1,841,791,440
13. 미수채화및용역제공수익	12,124,036,841	31,864,193,064	14. 단기주택도시기금차입금	2,189,933,240	2,456,125,550
14. 미수연금수익	154,996,833,301	86,521,047,951	15. 단기부담금정산선수금	4,338,196,608	3,135,946,869
15. 미수기타수익	2,641,140,088	3,322,521,504	16. 단기기주비예수금	6,787,752,000	—
16. 기타의미수금	162,400,814,398	227,154,869,258	17. 단기파생상품부채	—	13,622,149,511
17. 현금성자산미수수익	829,173,015	1,080,448,015	II. 비유동부채	2,260,798,288,917	1,994,633,390,966
미수채권대손충당금	△19,484,787,123	△15,785,425,556	(I) 비유동부채	2,260,798,288,917	1,994,633,390,966
기타미수금대손충당금	△884,398,122	△889,455,905	1. 주택도시기금차입금	492,361,560,010	316,280,934,460
당좌자산대손충당금	△63,000	—	2. 퇴직급여충당금	21,867,525,342	23,949,225,341
(2) 재고자산	275,280,847,080	114,909,616,374	3. 퇴직금전환금	△70,007,931	△49,926,996
1. 상품	39,274,890	37,069,481	4. 퇴직보험예치금	△556,000,000	△4,883,754,295
2. 음료	149,370	36,774	5. 사택임차대여금	△2,000,000,000	—
3. 저장품	482,749,636	529,865,574	6. 임대주택수선충당금	29,138,571,477	33,927,643,456

자 산			부 채 및 자 본		
4. 분양주택	117,659,297,447	7,616,612,506	7. 주택임대보증금	1,715,423,813,150	1,625,322,869,000
5. 미완성분양주택	157,099,375,737	106,726,032,039	8. 부담금정산선수금	3,135,946,869	—
(3) 기타유동자산	12,400,488,233	11,708,489,587	9. 독신자숙소보증금	1,496,880,000	86,400,000
1. 선급금	1,624,801,000	57,130,000	Ⅲ. 대여학자금수탁금(신)	4,533,895,397,435	4,523,078,320,945
2. 선급비용	213,958,400	152,955,987	(1) 대여학자금수탁금	4,533,895,397,435	4,523,078,320,945
3. 부가세대급금	179,071,984	—	1. 대여학자금수탁금_국가	1,512,856,864,807	1,511,844,518,818
4. 선급법인세	10,382,656,849	11,498,403,600	2. 대여학자금수탁금_지자체	3,021,038,532,628	3,011,233,802,127
(4) 대부자산	520,420,058,571	524,434,251,089	(부채 합계)	7,154,643,133,486	7,330,885,190,490
1. 대여학자금	537,775,995,983	542,316,040,391	자본	—	—
단기용자보조원가충당금	△17,355,937,412	△17,881,789,302	Ⅳ. 공무원연금기금	8,754,221,761,902	10,321,103,010,799
Ⅱ. 비유동자산	12,202,604,733,049	14,173,505,322,730	(1) 자본금	5,299,967,430,225	5,606,796,498,207
(1) 투자자산	4,337,938,357,824	5,439,614,257,935	1. 기금전입금	828,946,992,859	828,946,992,859
1. 주택도시기금예탁금	10,000,000,000	10,000,000,000	2. 적립금	763,927,722,000	763,927,722,000
2. 공무원연금대부금	852,116,441,385	861,774,950,940	3. 결산상잉여금증가	3,707,092,715,366	4,013,921,783,348
3. 채무증권	1,540,546,800,264	2,068,629,106,739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65,335,358,294	3,670,062,963,191
4. 지분증권	1,935,275,116,175	2,499,210,200,256	1. 유가증권평가이익	272,769,514,337	306,110,704,750
(2) 대부자산	3,011,518,326,174	2,884,844,500,463	채무증권평가이익	42,987,755,348	30,534,996,428
1. 장기대여학자금	3,472,287,178,702	3,257,206,379,164	지분증권평가이익	229,781,758,989	275,575,708,322
용자보조원가충당금	△460,768,852,528	△372,361,878,701	2. 유가증권평가손실	△81,960,566,039	△62,311,779,793
(3) 유형자산	4,642,591,231,942	5,705,894,515,240	채무증권평가손실	△2,198,482,037	△20,346,210,102
1. 토지	2,835,502,957,760	4,054,236,001,633	지분증권평가손실	△79,762,084,002	△41,965,569,691
2. 건물	1,604,733,506,742	1,741,246,263,394	3. 유형자산재평가이익	2,274,526,409,996	3,426,264,038,23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98,783,368,503	△227,611,455,388	토지재평가이익	2,139,629,792,854	3,327,494,444,426
3. 건설중인자산	311,977,529,432	17,714,613,324	건물재평가이익	134,896,617,142	98,769,593,808
4. 차량운반구	11,700,815,977	11,964,362,996	(3) 이익잉여금	988,918,973,383	1,044,243,549,401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361,197,177	△7,947,094,572	1. 이익적립금증가	1,261,392,806,971	1,044,243,549,401
5. 집기비품	25,638,195,392	37,492,789,440	2. 이익적립금감소	△272,473,833,588	—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14,187,294,442	△18,443,036,011	(자본 합계)	8,754,221,761,902	10,321,103,010,799
6. 기계장치	18,422,831,945	28,057,645,580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8,616,656,485	△12,194,140,108			—
7. 구축물	85,315,113,155	108,022,176,762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2,751,201,854	△26,643,611,810			—

자 산		부 채 및 자 본	
(4) 무형자산	8,546,288,626	7,140,053,162	—
1. 소프트웨어	8,546,288,626	7,140,053,162	—
(5) 기타비유동자산	202,010,528,483	136,011,995,930	—
1. 직원대부금	1,989,854,320	1,525,896,970	—
2. 기타유가증권	940,180,000	872,510,000	—
3. 전신전화가입권	1,170,000	726,000	—
4. 임차보증금	10,986,065,308	15,294,038,000	—
5. 영업보증금	116,920	145,640	—
6. 장기미수보전금	161,263,006,273	88,141,811,683	—
7. 부담금정산미수금	—	486,376,287	—
8. 장기미수연금수익	35,498,594,970	34,272,071,350	—
9. 소송예치금	—	95,450,000	—
장기미수금대손충당금	△127,397,308		—
장기대부자산대손충당금	△8,541,062,000	△4,677,030,000	—
Ⅲ. 본지부계정	—	—	—
(ⅰ) 본지부계정	—	—	—
1. 본부	△3,328,013,205,346	△3,351,327,197,269	—
2. 지부	3,328,013,205,346	3,351,327,197,269	—
(자산 합계)	15,908,864,895,388	17,651,988,201,289	(부채 및 자본 합계) 17,651,988,201,289

4.2 손익계산서

비 용			수 익		
과 목	2015년	2016년	과 목	2015년	2016년
I. 사업비용	14,434,543,278,002	14,619,683,341,849	I. 사업수익	14,751,564,677,572	14,958,909,097,627
(I) 금융부문비용	110,235,524,050	137,944,731,686	(I) 연금수입	13,787,052,925,012	14,141,396,133,023
1. 지급수수료	3,466,080,149	3,081,555,345	1. 연금기여금	3,818,540,807,140	4,469,180,730,515
2. 세금공과	1,333,153,440	344,596,701	2. 연금부담금	4,347,892,029,000	5,170,030,248,400
3. 차입금이자	68,054,790	—	3. 재해보상부담금	123,429,768,556	134,865,351,635
4. 소송비	1,076,782,408	321,549,435	4. 퇴직수당부담금	2,247,894,055,840	1,930,234,575,390
5. 자산운용비	226,926,801	278,139,968	5. 연금이체부담금	48,219,380,350	51,062,277,900
6. 연구용역비	547,153,000	249,470,000	6. 보전금	3,072,736,884,126	2,318,852,949,183
7. 단기유가증권처분손실	40,701,746,544	9,752,199,595	7. 기금보전금	128,340,000,000	67,170,000,000
8. 유가증권처분손실	4,944,247,498	12,617,806,744	(2) 금융자산운용수익	412,037,891,290	459,291,583,413
9. 유가증권손상차손	242,253,712	45,391,926,416	1. 보통예금이자	96,623,023	75,627,457
10. 파생상품평가손실	—	13,622,149,511	2. 지불준비금이자	24,140,013,469	25,650,932,607
11. 용자보조비용	57,629,125,708	52,285,337,971	3. 주택도시기금이자	274,401,917	147,101,918
(2) 복지및부동산사업비	562,268,040,686	368,152,922,174	4. 대여학자금이자	140,166,459,908	140,166,459,908
1. 부동산관리비	618,414,470	1,921,740,234	5. 공무원연금대부이자	50,103,315,939	46,991,298,466
2. 지급임차료	594,972,392	660,375,253	6. 단기유가증권처분이익	55,739,833,652	80,868,286,726
3. 지급수수료	6,041,702,017	4,854,653,273	7. 유가증권처분이익	38,512,168,572	10,833,091,470
4. 소송비	143,783,524	205,153,090	8. 유가증권손상차손환입	1,312,561,205	21,963,871
5. 수선유지비	332,118,690	332,559,337	9. 유가증권이자수익	89,526,405,126	111,830,339,449
6. 시설유지비	16,940,072,090	16,063,076,293	10. 지분증권배당수익	12,166,108,479	27,871,778,157
7. 주택도시기금차입금이자	16,681,811,030	9,663,057,855	11. 파생상품평가이익	—	939,061
8. 분양주택사업비	425,509,124,232	227,864,672,333	12. 기타금융자산이익	—	14,833,764,323
9. 분양주택판매비	2,136,328,381	293,678,492	(3) 대부수익	744,373,680	1,438,097,323
10. 상품매입	5,597,809,607	5,473,572,922	1. 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744,373,680	1,438,097,323
11. 식재료비	7,118,861,342	7,432,723,476	(4) 복지및부동산사업수익	551,729,487,590	356,783,283,868
12. 음료재료비	698,720,530	690,257,201	1. 부동산임대수익	10,462,722,815	9,527,747,718

비 용			수 익		
13. 기타재료비	473,101,726	523,172,751	2. 주택임대수익	6,468,968,782	12,683,735,623
14. 세금공과	13,051,484,817	13,756,079,546	3. 주택보양대금	462,916,622,167	258,528,777,951
15. 감가상각비	44,283,612,665	54,600,901,085	4. 독신자숙소운영비수입	1,927,312,740	954,374,240
16. 보험료	202,187,624	172,484,887	5. 상품판매대금	6,389,938,308	6,253,890,910
17. 전력수도료	3,250,896,647	3,114,000,346	6. 식료판매대금	8,642,475,148	8,986,306,614
18. 연료비	2,291,848,798	1,587,187,201	7. 음료판매대금	819,490,459	830,478,402
19. 용역비	13,533,926,463	14,868,237,108	8. 숙박시설이용료	4,758,190,982	4,959,872,405
20. 영업비	2,252,518,721	2,226,507,945	9. 휴욕시설수입	2,266,944,790	1,823,900,370
21. 대손상각비	110,956,042	619,609,956	10. 수영장수입	1,804,862,456	1,759,914,058
22. 분양주택관리사업비	388,788,878	1,026,882,499	11. 기타후생시설운영수익	4,062,715,999	4,875,989,106
23. 연구개발비	15,000,000	202,339,091	12. 골프시설이용료	39,602,430,447	44,100,946,017
(3) 연금급여사업비	13,756,327,879,150	14,107,373,345,777	13. 공원시설이용료	1,606,812,497	1,497,350,454
1. 퇴직급여	11,376,634,724,820	12,036,189,456,730	Ⅱ. 사업외수익	192,746,019,820	195,342,278,338
2. 공상급여	80,185,913,240	88,531,725,110	(Ⅰ) 사업외수익	192,746,019,820	195,342,278,338
3. 퇴직수당	2,247,894,055,840	1,930,234,575,390	1. 직원숙소임대수익	68,937,637	72,399,611
4. 부조급여	38,726,712,530	39,608,905,450	2. 직원대부이자	16,735,300	9,160,670
5. 연금이체급여	9,100,152,210	9,597,079,970	3. 외환차익	1,840	1,500
6. 순직급여	3,786,320,510	2,795,298,760	4. 연체료수익	1,296,667,802	1,225,032,348
7. 소송비	—	108,721,511	5. 예입금이자	1,527,276,335	1,605,380,916
8. 연금사업운영비	—	307,582,856	6. 부담금미납이자	626,654,060	263,406,000
(4) 전산업무비	3,682,925,554	4,215,245,807	7. 잡수익	5,975,284,384	5,110,422,951
1. 전산용품비	246,999,645	256,700,908	8. 대손충당금환입액	59,956,544	6,656,492,229
2. 전산시설수선비	2,802,374,909	3,358,067,899	9. 급여환수금	8,445,077,757	9,912,801,846
3. 전산용역비	633,551,000	600,477,000	10. 기타유가증권이자	13,436,083	11,905,053
(5) 업무위탁비	2,028,908,562	1,997,096,405	11. 연금지광고수입	137,960,000	50,100,000
1. 위탁수수료	2,028,908,562	1,997,096,405	12. 연금지구독료수입	2,122,439,000	2,181,604,003
Ⅱ. 관리운영비	57,722,788,166	60,638,949,929	13. 유형자산처분이익	165,059,613,633	155,278,525,327
(Ⅰ) 인건비	40,776,079,544	42,011,170,596	14. 교육수입	4,716,723,083	6,374,798,833

비 용			수 익		
1. 퇴직금	4,307,301,626	5,037,418,848	15. 환수이자수익	905,111,863	335,569,305
2. 인건비	36,468,777,918	36,973,751,748	16. 구상금수익	1,774,144,499	738,513,462
(2) 일반경비	16,946,708,622	18,627,779,333	17. 재평가손실환입	—	5,516,164,284
1. 복리후생비	1,108,603,295	1,648,794,253		—	—
2. 법정부담금	2,811,227,904	2,935,972,566		—	—
3. 여비교통비	823,667,207	719,500,960		—	—
4. 전력수도료	26,511,830	—		—	—
5. 피복비	67,373,000	137,554,300		—	—
6. 지급임차료	63,551,477	65,946,921		—	—
7. 차량비	69,133,349	69,355,671		—	—
8. 연구개발비	593,171,570	387,674,278		—	—
9. 운반보관료	125,240,403	—		—	—
10. 일반수용비	1,059,272,003	856,787,010		—	—
11. 공공요금및제세금	1,170,457,628	1,152,060,634		—	—
12. 업무추진비	494,953,365	501,087,997		—	—
13. 회의비	343,339,970	229,296,272		—	—
14. 교육훈련비	892,252,972	1,183,971,805		—	—
15. 포상비	76,985,780	69,735,000		—	—
16. 감가상각비	1,798,404,325	3,164,419,762		—	—
17. 무형자산상각비	5,422,562,544	5,505,621,904		—	—
Ⅲ. 사업외비용	16,875,563,242	111,775,440,187		—	—
(1) 사업외비용	8,531,571,166	36,477,304,615		—	—
1. 유형자산처분손실	497,149,772	13,699,290		—	—
2. 연금지제작비	1,840,707,428	1,917,127,178		—	—
3. 부담금과납이자	73,863,340	96,659,930		—	—
4. 교육비	4,897,520,327	6,568,128,357		—	—
5. 사회참여활동지원비	1,222,330,299	1,147,096,231		—	—
6.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26,734,593,629		—	—

비 용			수 익		
(2) 기타사업외비용	8,343,992,076	75,298,135,572	—	—	
1. 외환차손	578	—	—	—	
2. 잡손실	265,639,257	1,391,966,037	—	—	
3. 연금전출금(비용)	—	67,170,000,000	—	—	
4. 선납할인료	5,047,245,537	—	—	—	
5. 맞춤형복지운영비	126,156,810	193,854,071	—	—	
6. 기타특별손실(이동)	2,008,711,744	6,399,599,825	—	—	
7. 기타대손상각비	896,238,150	142,715,639	—	—	
(비용 합계)	14,509,141,629,410	14,792,097,731,965	(수익 합계)	14,944,310,697,392	15,154,251,375,965
IV. 연금회계지원금	625,105,567,370	602,624,123,803			
(I) 연금회계지원금	625,105,567,370	602,624,123,803			
1. 퇴직급여지급준비금	496,765,567,370	602,624,123,803			
2. 연금회계전출금	128,340,000,000	—			
V. 기금부담금	496,765,567,370	602,624,123,803			
(I) 기금부담금	496,765,567,370	602,624,123,803			
1. 전입금	496,765,567,370	602,624,123,803			
VI. 당기순이익	△189,936,499,388	△240,470,479,803			
(I) 당기순이익	△189,936,499,388	△240,470,479,803			
1. 당기순이익	△189,936,499,388	△240,470,479,803			

5.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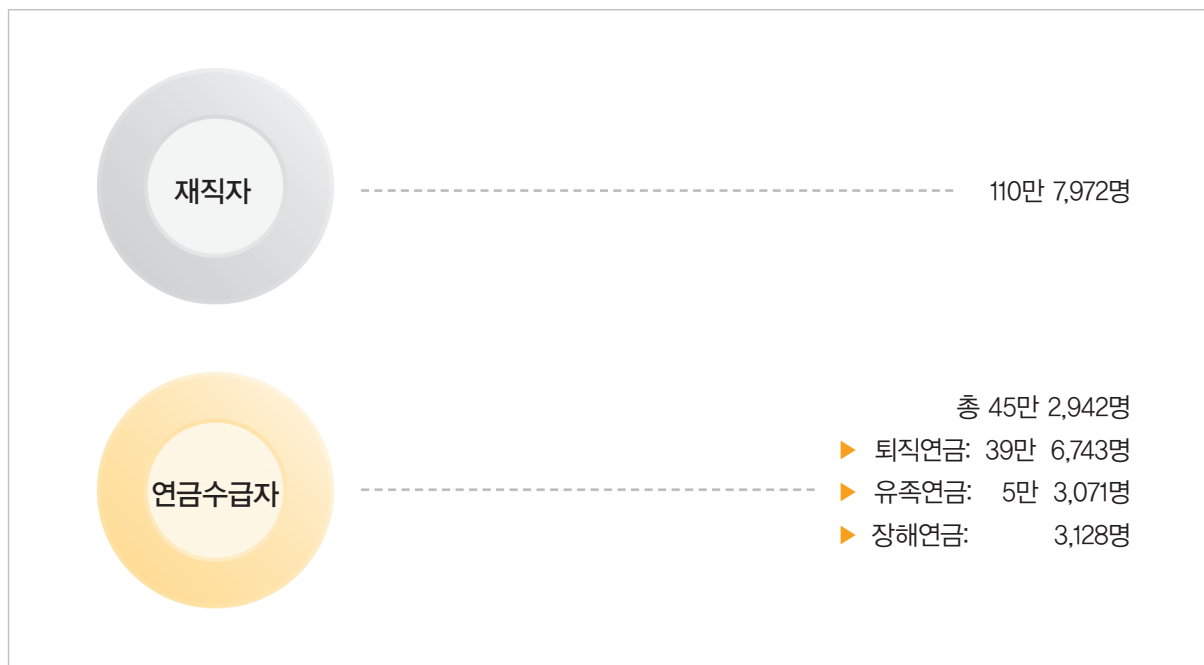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 현황
- 재직공무원 분포 구조
- 퇴직공무원 분포 구조
- 연금수급자 분포 구조
-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 추이
- 적용대상 공무원 직종별 현황
- 연금수급자 추이
- 연금선택 추이
- 급여종류별 지급 추이
- 공무원연금기금 증가 추이
-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

■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인 원
재 직 자	1,107,972
연금수급자	452,942
퇴직연금수급자	396,743
유족연금수급자	53,071
장해연금수급자	3,128

인원 현황



■ 재직공무원 분포 구조

- ❖ 2016년말 재직자 수는 1,107,972명이며, 남녀성비는 55.4%(남) 대 44.6%(여)로 나타남.
- ❖ 2016년 현재 재직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2.5세이며, 평균 17.2년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년 이상 재직자는 전체 재직자의 41.6%, 10년 이상 재직자는 70.1%를 차지함.

재직공무원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인원 및 금액·비중
• 재직자 수	 1,107,972명
• 성비율	 55.4%(남) : 44.6%(여)
• 직종 비율	 67.0%(비교육직) : 33.0%(교육직)
• 평균연령	 42.5세
• 평균 재직 연수	 17.2년
• 재직 기간 20년 이상 비율	 41.6%
• 재직 기간 10년 이상 비율	 70.1%
• 기여금 총액	 4조4,692억 원

■ 퇴직공무원 분포 구조

- ❖ 2016년 퇴직자 수는 38,398명이며, 퇴직자의 남녀성비는 74.7%(남) 대 25.3%(여)로 나타남.
- ❖ 2016년 퇴직자의 평균연령은 52.7세이며, 평균 26.1년 재직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20년 이상 재직자는 75.9%, 10년 이상 재직자는 80.4%임.

퇴직공무원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인원 및 금액·비중
• 2016년도 퇴직자 수 	38,398명
• 성비율 	74.7%(남) : 25.3%(여)
• 평균연령 	52.7세
• 평균 재직 연수 	26.1년
• 재직 기간 20년 이상 비율 	75.9%
• 재직 기간 10년 이상 비율 	80.4%
• 직종 비율 	74.8%(비교육직) : 25.2%(교육직)

※ 퇴직공무원: 2016년도 중 퇴직(사망)으로 급여를 지급한 건수임

■ 연금수급자 분포 구조

- ❖ 공무원연금수급자 수는 약 45만 명이며 부양률(연금수급자수/재직자수)은 40.5%로 나타남.
 - 퇴직연금수급자는 88.3%(396,743명)를 차지하며, 유족연금수급자는 나머지 11.7%(52,410명)를 차지하고 있음.
- ❖ 2016년 연금수급자의 평균연령은 67.0세이며, 교육직은 전체 연금수급자의 30.8% 정도를 차지하며 남녀성비는 73.0%(남) 대 27.0%(여)로 나타남.

연금수급자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인원 및 비중
• 연금수급자 수 	449,153명
• 평균연령 	67.0세
• 성비율 	73.0%(남) : 27.0%(여)
• 직종 비율 	69.2%(비교육직) : 30.8%(교육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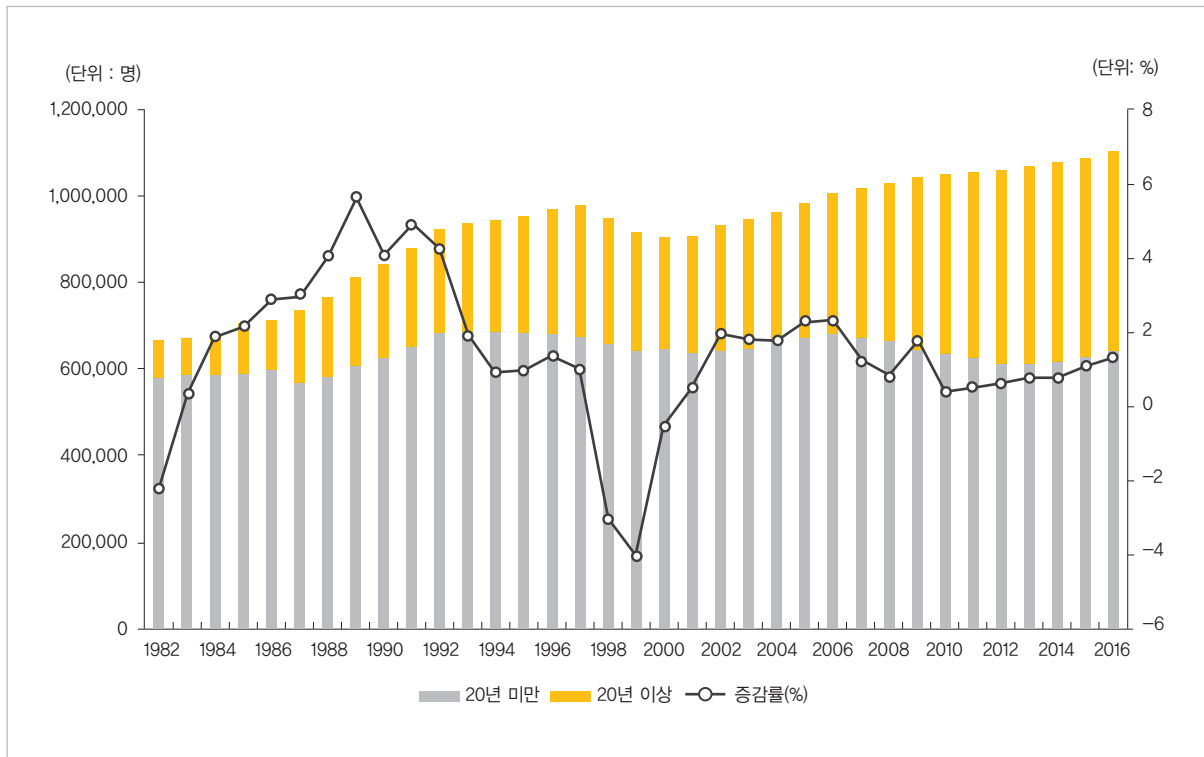
연금수급자의 급여 분포

(단위: 명, 2016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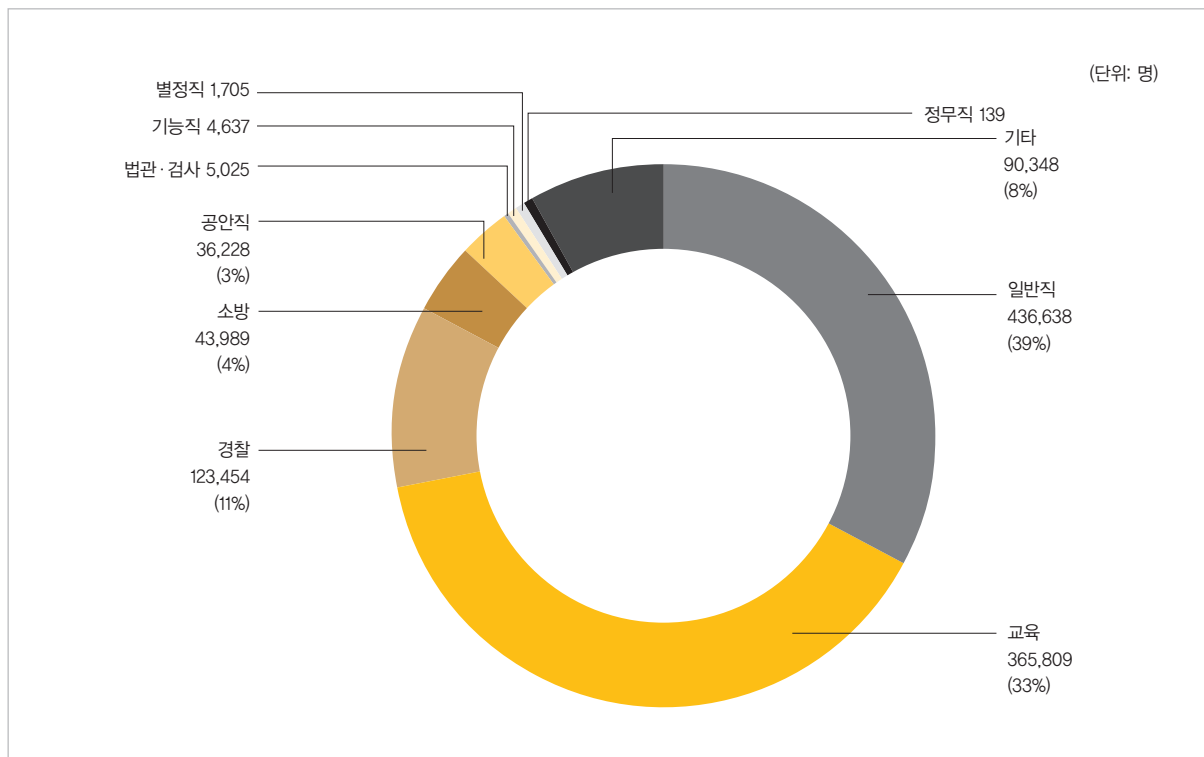
계	퇴직연금	유족연금
449,153	396,743	52,410

* 장해연금수급자(3,128명) 및 장해유족연금수급자(661명)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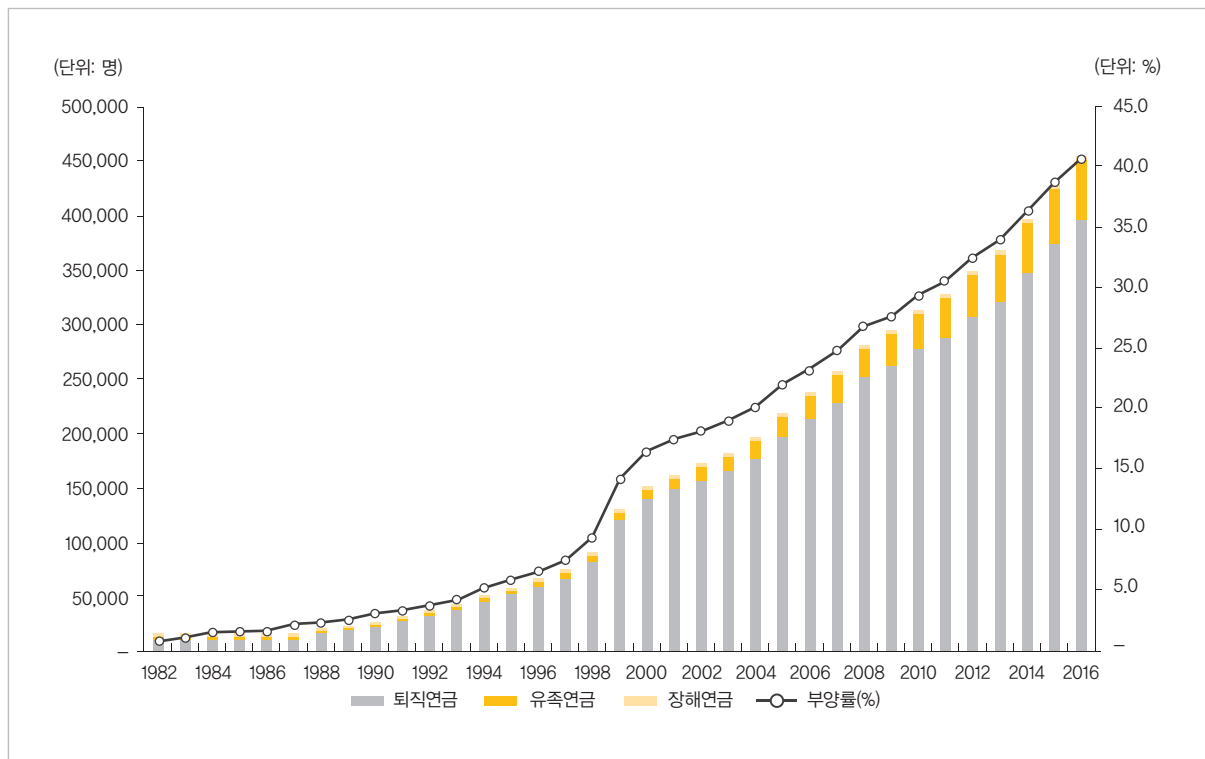
■ 적용대상 공무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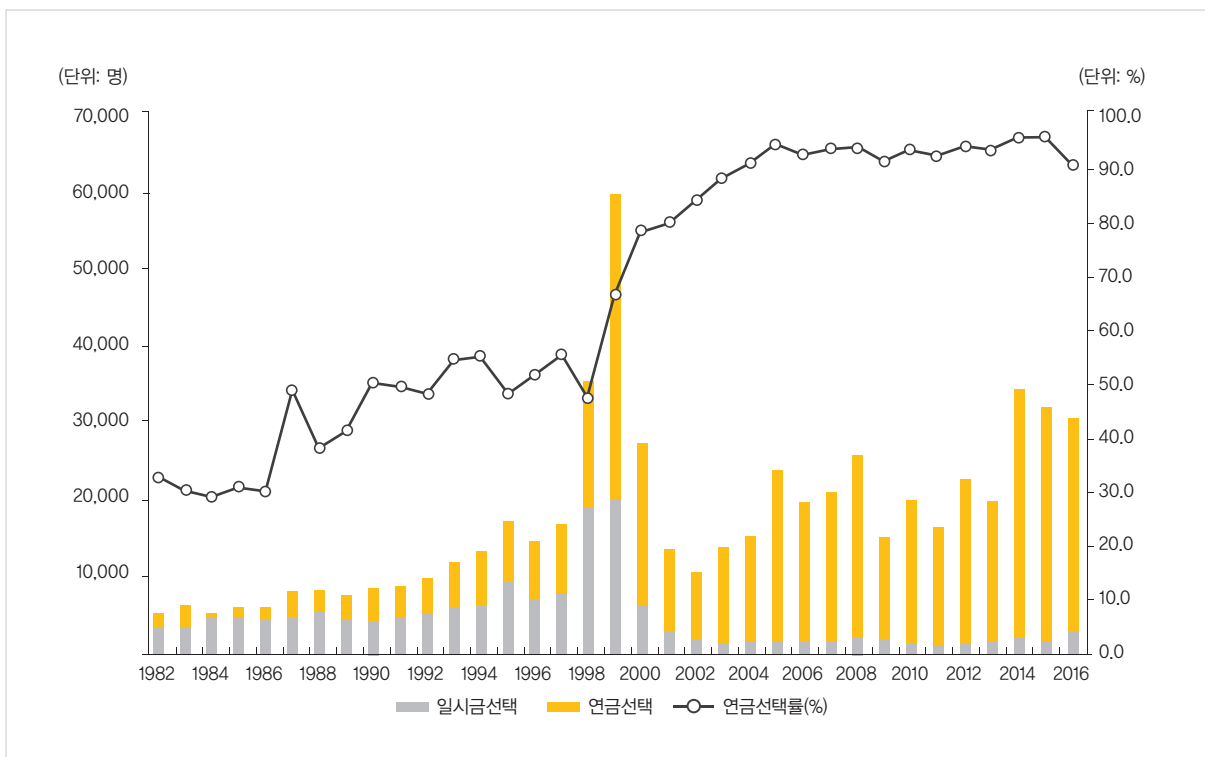
■ 적용대상 공무원 직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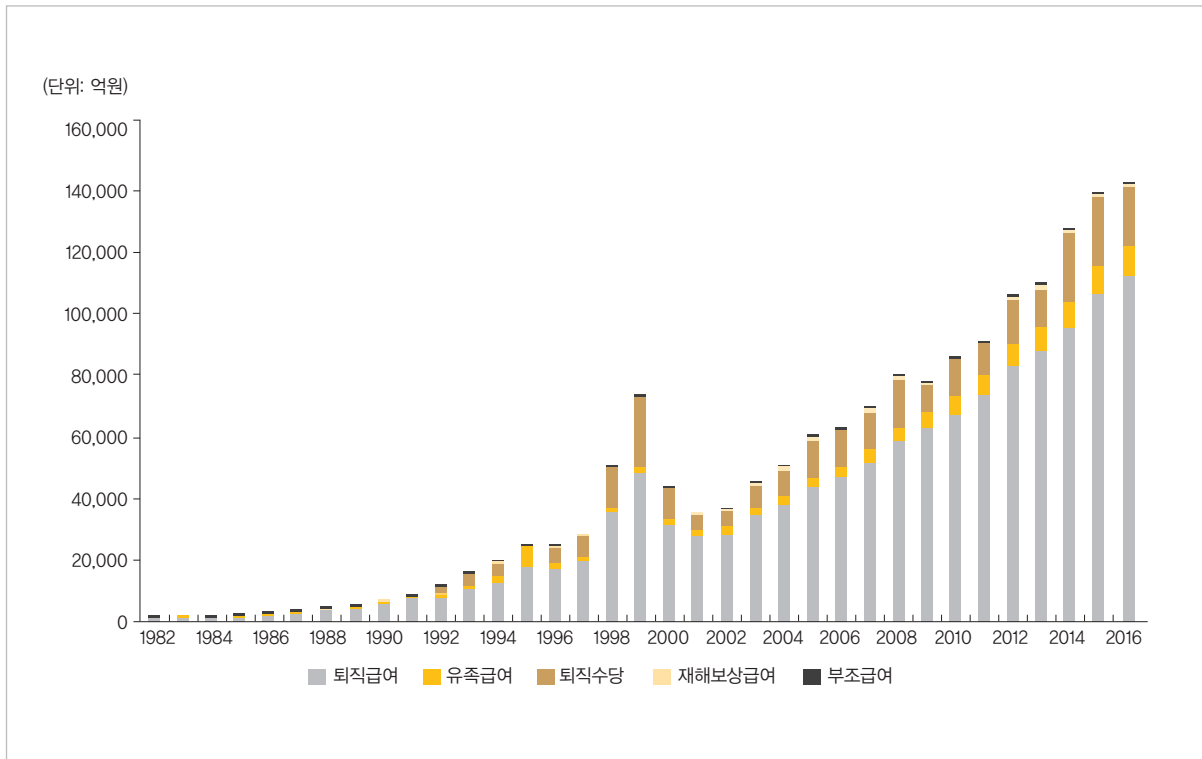
■ 연금수급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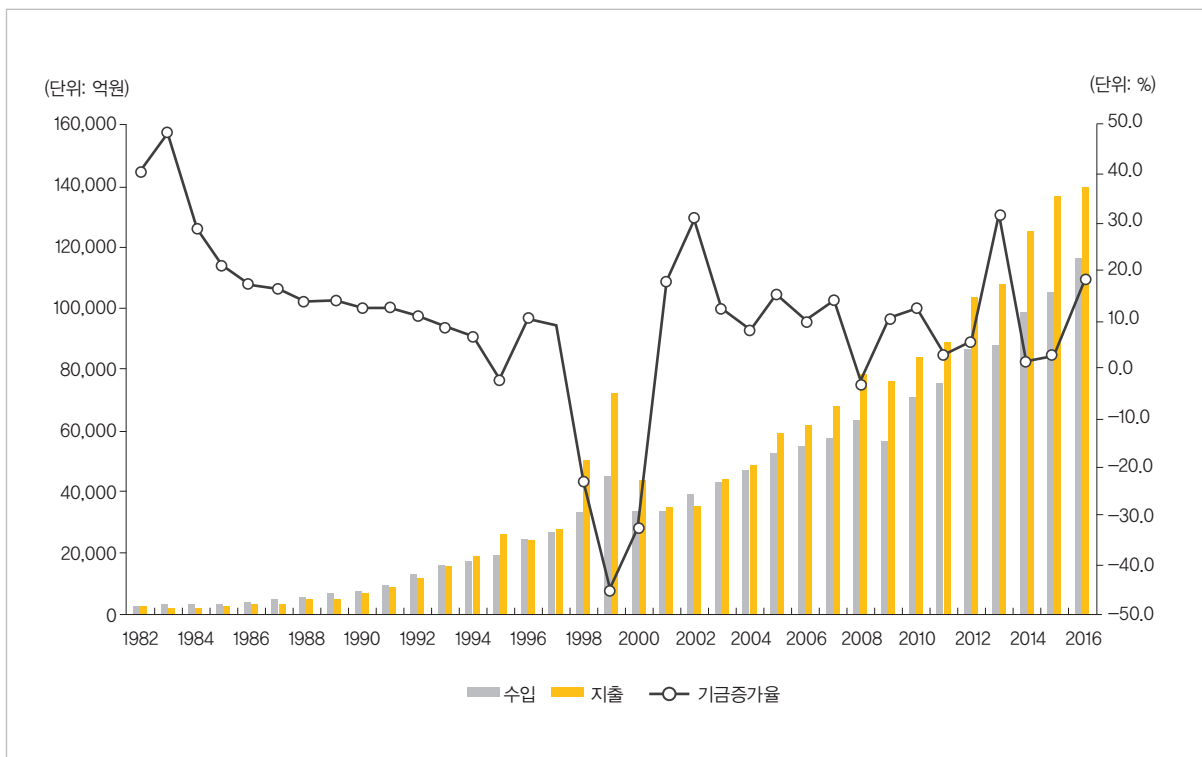
■ 연금선택 추이



■ 급여종류별 지급 추이



■ 공무원연금기금 증가 추이



■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단위: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주택도시기금예탁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투자유가증권	41,412	32,844	38,992	42,828	42,361	38,344	38,037	38,938	45,896	58,182
	연금대출	8,456	8,396	8,539	8,632	8,312	10,176	12,847	12,728	12,670	12,581
	목적대출	-	-	-	-	-	-	-	-	-	-
	융자 사업 학자금 대출	-	-	-	-	-	-	36,207	35,973	35,319	34,092
	소계	8,456	8,396	8,539	8,632	8,312	10,176	49,054	48,701	47,989	46,673
	주택사업	12,173	15,086	18,019	20,414	21,705	25,432	44,911	46,756	41,727	48,656
	시설운영사업	3,561	3,525	3,478	3,316	3,860	4,130	8,432	8,612	7,909	10,211
	지불준비금 등	3,078	4,874	2,000	3,766	5,081	9,327	11,737	13,985	15,468	12,697
	계	68,780	64,825	71,128	79,056	81,419	87,509	152,271	157,092	159,089	176,519
부채	융자 사업 학자금 대출	-	-	-	-	-	-	45,084	45,291	45,339	45,231
	주택사업	10,285	11,198	11,268	14,175	15,795	18,934	21,173	24,868	24,376	25,765
	시설운영사업	341	331	319	377	360	306	324	408	199	137
	기타	10,111	6,435	7,668	6,197	5,159	4,693	2,020	1,253	1,633	2,175
	계	20,737	17,964	19,255	20,749	21,314	23,933	68,601	71,820	71,547	73,308
자본		48,043	46,861	51,873	58,307	60,105	63,576	83,670	85,272	87,542	103,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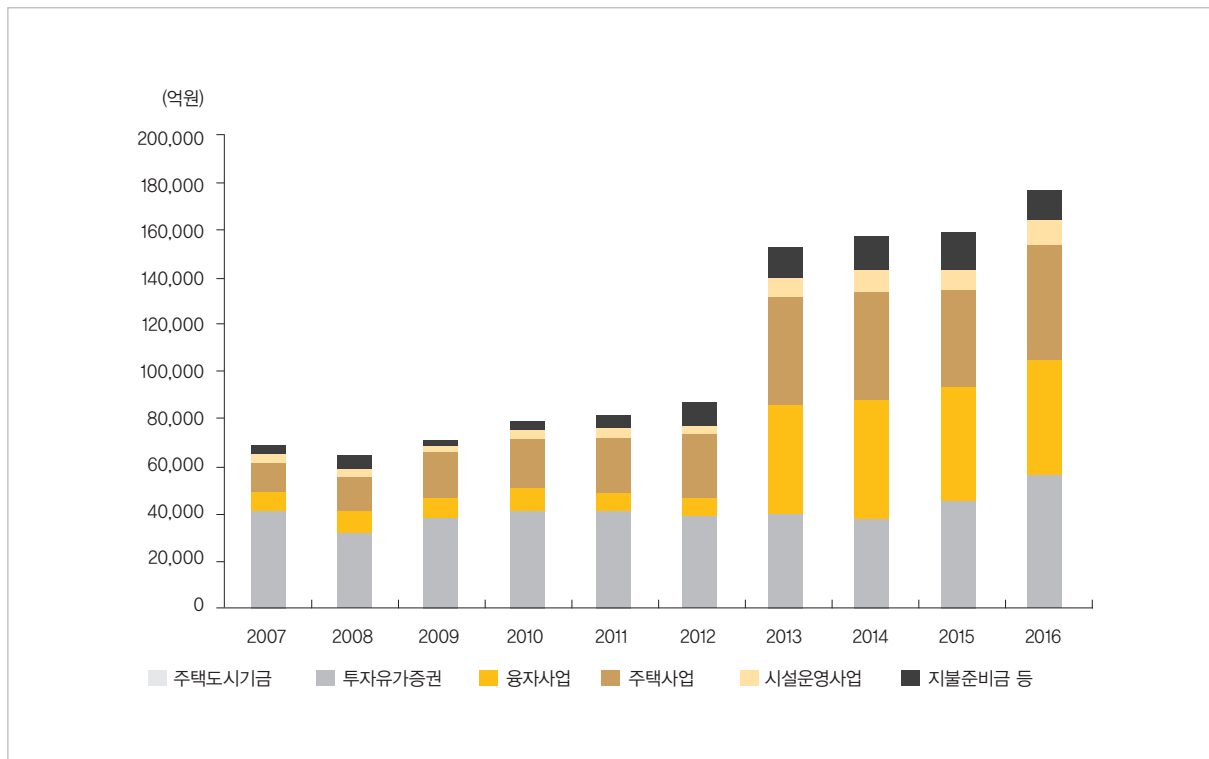
주) 1. 자산의 투자유가증권에는 채권·예금, 주식, 신탁상품, SOC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2. 부채의 주택사업에는 주택임대보증금, 주택도시기금차입금이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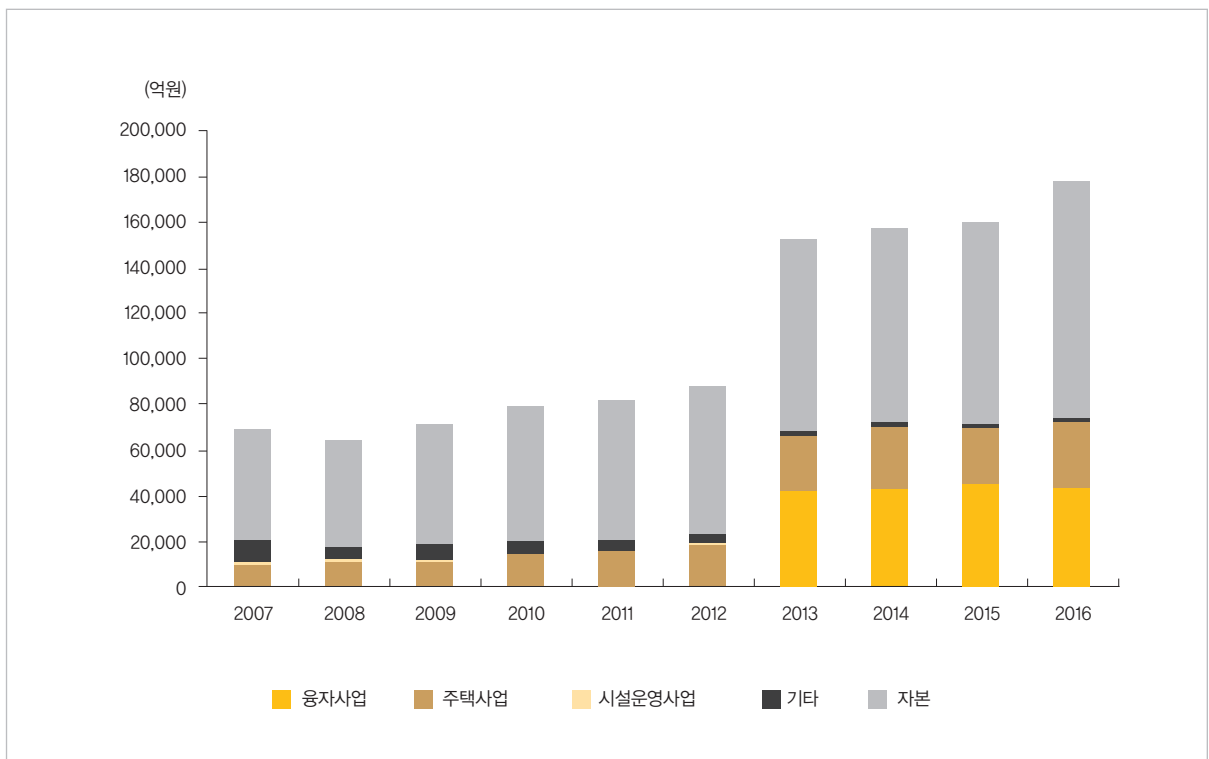
3. 부채의 기타는 재정자금차입금, 부담금선수금 등이 포함되었음

4. 2013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실물자산 시가평가 등 반영) 적용

■ 자산



■ 부채 및 자본



연구-17-2-92
ISBN 978-89-91754-45-4

2016년
공무원연금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7년 4월 28일 발행
발행자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인 쇄 이오복스

